정 책 담 당 자 가 만 드 는 경 제 정 보 지

나라경제

2004.4

특 집

쌀 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정책해설|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원칙과 인내 필요
-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 전자태그산업 육성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국내경제 이슈|

우리 산업경쟁력의 현주소와 시사점

|탐방|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이달의 초점

원자재 수급난, 해법 없나

인터뷰 허상만 농림부장관



|세계경제의 현장|

·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DDA 농업협상 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정보지

나라경제

2004. 4 통권 제161호



2004년 3월호

| 탐방 |

04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 / 유경수

| 인터뷰 |

09 **허상만 농림부장관**



| 특집 |

쌀 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6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 / 김성민
20 쌀, 시장 개방의 현주소와 대책 / 안총기
23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절차와 주요 쟁점 / 김희상
26 일본·대만, 사전 준비 정도가 희비 갈라 / 서진교
30 미국 위협하는 중국 쌀 수출 잠재력–세계 쌀 산업 현황 / 최용규
35 농업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 / 이태호
38 '규모화'로 농업소득 증대를 / 사공 용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 이달의 초점 | 원자재 수급난, 해법 없나

44 수급기업간 정보 공유로 수요·가격 예측력 높여야 / 이병욱
47 무역금융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정신 긴요 / 김재숙
50 중국發 원자재난에 종합·장기적 대응을 / 엄성필
54 안정적 원자재 수급에 만전 / 김성환

| 경제정책해설 |

58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원칙과 인내 필요 / 추경호
61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 나승렬
65 전자태그산업 육성 : u-센서 네트워크 기본계획 / 조규조
68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 강형신
71 마일리지제도의 공정 운영 강화 / 송상민

| 세계경제의 현장 |

75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 권해룡
81 DDA 농업협상 동향 / 김정한

| 경제동향 |

85 국내경제 동향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 커지는 국내경기
91 세계경제 동향 미국·일본 중심으로 회복세 이어가는 세계경기

| 경제이슈 |

97 국내경제 이슈 우리 산업경쟁력의 현주소와 시사점

104 생활경제 목돈 마련, 기교보다는 우직함이 중요 / 한상언
106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은행이 파산하면 내 예금은 어찌 되나? / 김인철

발 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 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 행 인 김중수 KDI 원장
편 집 인 한승희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김홍진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 신현석 통상기획홍보팀장
과학기술부 류중익 정책총괄과장
농 림 부 심상인 행정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 박일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 서병조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노길상 기획예산담당관
환 경 부 강형신 정책총괄과장
노 동 부 한창훈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 김경식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우예종 기획예산제도과장
기획예산처 정홍상 예산제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신호현 총괄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박상조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흥빈 총괄조정팀장
KDI 경제정보센터 김인철 정책홍보실장
편집간사 이재영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 집 장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이재열, 유성임, 이정미
배포업무 김석화

발 행 일 2004년 4월 1일(매월 1회 발행) 제15권 제4호(통권 제161호)
등 록 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발 행 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77-8033 4
주 소 (130-012)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113
전 화 02-958-4114
팩 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e-mail nara@kdi.re.kr
기사문의 02-958-463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26

구 독 료 권당 2,500원, 연간 25,000원

인 쇄 고려문화사
표지디자인 상상가가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앞줄 좌로부터 박창형 산업표준품질과장, 임채민 국장, 정만기 산업기술개발과장, 뒷줄 좌로부터 정창현 산업기술개발과 서기관, 박원주 산업인력팀장, 백철규 디자인브랜드과 서기관, 황수성 산업기술정책과 서기관, 정양호 디자인브랜드과장

산업기술국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산업기술국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시스템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 기피 풍조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과학기술자를 희망하는 숫자가 100명 중 9명에 불과하다는 산업기술재단의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분명 이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보이지 않는 잠재적 불안요인이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배금주의와 비상식적인 정치·사회적 풍토를 드러내는 슬픈 자화상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일은 아니다. 오늘도 묵묵히 그러나 역동적으로 제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가의 꿈을 키우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간다. 국가 간 관계도 그렇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라의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기술혁신이다.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은 바로 그러한 부서다.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쟁, 지식기반경제의 시기에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

역할이 중요한 만큼 산업기술국에는 인재들이 몰려 있다. "장관이 되려면 산업기술국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처 내에서는 핵심부서로 분류된다. 실제 산업자원부의 한해 예산 4조원(에너지특별회계 포함) 중 25% 가까이를 산업기술국이 집행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시스템 마련, 기술인력·국가표준·디자인 등 기술혁신 인프라 확충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분야가 없다.

산업기술국을 이끌고 있는 임채민 국장(46세)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 존스홉킨스대학(석사) 및 경희대학교(박사)에서 경제학 학위를 땄다. 상공부에서 공직을 시작, 대통령 비서실, 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장·총무과장을 거쳤고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미디어 분야를 총괄하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에 복귀한 뒤에는 공보관·국제협력투자심의관을 거쳐 지난 2월 산업기술국장으로 부임했다. 듬직한 체격과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인 임 국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편안한 상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넓은 대인관계와 탁월한 순발력을 겸비한 용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기술국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과, 산업표준품질과, 디자인브랜드과 및 산업인력팀의 4과 1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기술정책과는 산업기술국의 수석과로 21세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국가혁신체제(NIS)와 지역혁신체제(RIS)를 조화롭게 구축하고 '산업기술혁신법'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의 획기적 강화, 테크노파크(TP)·지역기술혁신센터(TIC)·연구개발전문기업 육성 등 기술하부구조의 확충, 신기술의 이전·사업화 정책을 통한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신기술 실용화 및 기술상용화전문합작법인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시대에 산업재산권 생산·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기도 하다.

산업기술정책과를 이끌고 있는 이창한 과장(47세)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특허청 심사관으로 공직을 시작, 산업자원부 방위산업과, 산업기계과, 수송기계과, 자동차·조선과 등의 사무관을 통해, 품질·디자인과장, 전자상거래총괄과장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산업기술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기술고시 18회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지닌 산업·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산업기술개발과는 효율적인 기술혁신시스템의 완성을 위한 산업기술기반 조성과 개발 시책의 수립·추진을 총괄한다. 또 전략적인 국제간 기술협력사업, 세계일류 기술 창출을 위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정, 기술 상품화를 위한 신기술실용화 개발,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담보 및 융자제도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우수 신기술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수립된 '산업기술 혁신 5개년계획'에 따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및 주력기간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평가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 성과 중심의 기술개발시스템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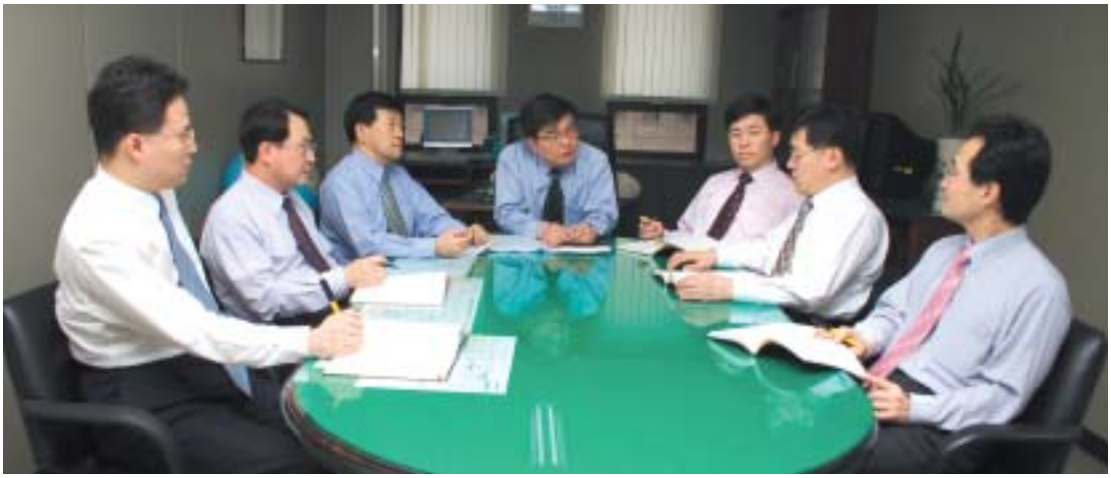
산업기술개발과를 이끌고 있는 정만기 과장(45세)은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 동 행정대학원(석사)을 거쳐, 파리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다.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산업진흥과·산업기술기획과에서 사무관·서기관 생활을 하였고, 자본재통상팀장·무역진흥과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산업기술개발과를 맡아 왔다. 우리나라 기술개발시스템을 한눈에 뚫어 보는 예리함과 해야 할 일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추진력이 돋보인다.

▲산업표준품질과는 표준·품질·계량 및 안전관리 등 국가표준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모토 아래 민간부문의 표준 역량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표준화 DB 구축, 인력양성 및 표준화 R&D의 효율적 관리를 바탕으로 한 표준화 인프라 구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未도입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전면 도입, 신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에 대한 중점 지원, 단체 표준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형 표준제도 확립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표준제도 정립에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산업표준품질과를 이끌고 있는 박창형 과장(50세)은 인하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특허청을 출발, 정밀화학과·생활용품과·요업과 등 산업·기술 관련 부서와 석유화학과·가스관리과·에너지관리과 등 에너지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쳐, 지난해 5월 산업표준품질과장으로 부임했다. 은근함과 부드러움으로 항상 집안의 맏형과 같이 직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일에 있어서는 차분함과 끈기를 발휘해 표준·품질 업무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디자인브랜드과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최후의 승부처인 디자인·브랜드 혁신 역량의 강화와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증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2007년까지 디자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정부 디자인산업 발전전략 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브랜드 경영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경영연구원 설립 등 브랜드육성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세계일류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해외 연수, 디자인 연구개발 능력 강화, 국제 디자인 교류 협력 강화 및 지역의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하나의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디자인브랜드 정책을 되돌아보고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총체적 전



략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말 개최되는 '산업디자인진흥대회'를 통해 관련 업계·학계 등 모든 전문가들이 정부의 디자인진흥계획 수립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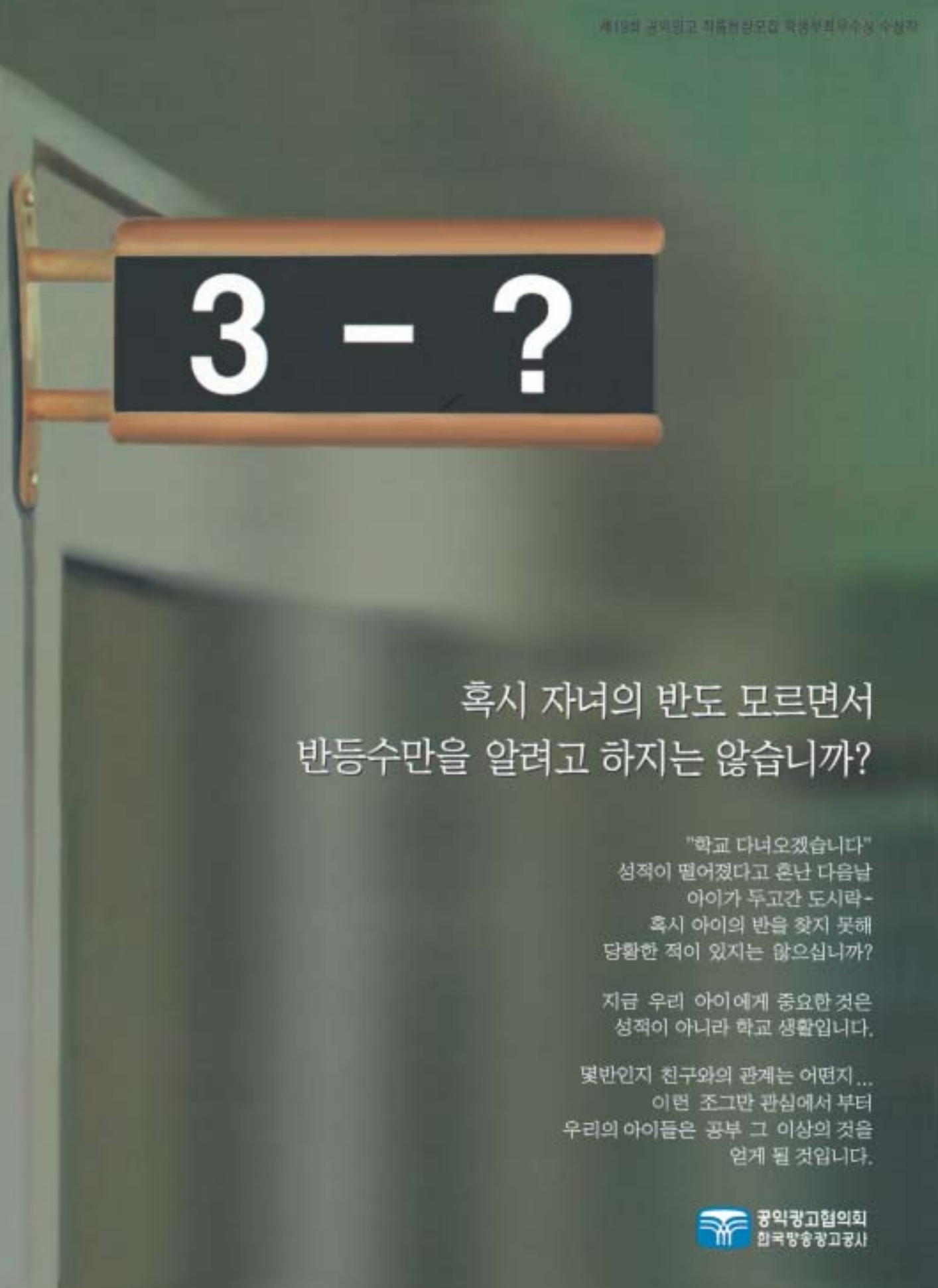
디자인브랜드과를 이끌고 있는 정양호 과장(44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및 미국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산업정책과·미주협력과 등을 거쳐 행정법무담당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5월 디자인브랜드과장으로 부임했다. 정양호 과장은 산업자원부 최고의 브레인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산업인력팀은 산업인력수급 종합대책, 이공계 인력유치제도 등 산업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서이다. 본래 산업기술정책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었으나, 중요성이 커지면서 태스크포스(T/F)로 독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선정, 공과대학 교육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수요자(기업) 중심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이공계 실업자 취업 지원, 병역대체복무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산학협력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원주 팀장(40세)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학 경제학 박사를 갖고 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자원정책과·기획예산담당관실 등에서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담당해 왔으며, 지난 2월부터 산업인력팀을 지휘하고 있다. 직원들과 호형호제하며 마치 대학 동아리와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팀을 이끌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퇴근 무렵 청사를 돌아보면 5층 산업기술국의 창은 환하게 밤을 밝힌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네들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노라면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온갖 뉴스를 접하다가도 봄날 우연히 삭막한 빌딩숲 사이에서 새싹을 만난 듯 마음 한 켠에 희망을 느끼곤 한다. 아침 출근길보다 퇴근길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고 여겨지는 이유,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글·**유경수** 연합뉴스 기자



혹시 자녀의 반도 모르면서
반등수만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난 다음날
아이가 두고간 도시락-
혹시 아이의 반을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학교 생활입니다.

몇반인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조그만 관심에서 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허상만 농림부장관

대담 노재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일시 2004년 3월 22일
장소 농림부장관 집무실



> 정부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다만 상대국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명분보다는 실리의 입장에서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협상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 잘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유예를 하도록 하였고, 이행기간 10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특별대우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UR협상 결과 이행최종연도인 2004년 즉, 올해 시작해서 올해 안에 협상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WTO사무국에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하였으며, 관심국가들은 90일 이내에 즉, 4월 20일까지 협상 참여의사를 밝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협상참가국이 확정되면 오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본격적인 양자협상을 하게 될 전망이며,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12월말까지는 모든 절차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로 간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주요국과 양자협상을 통하여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쌀 협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정하여졌습니까?

– 정부가 지난 1월 20일 쌀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한 것은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원하고 있으며 관세화 유예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148개 WTO 회원국들에게 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다만 상대국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에는 명분보다는 실리의 입장에서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조건을 협의하는 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상에서 논의될 그 유예조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 이번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내용은 현재 국내 소비량의 4%를 수입하고 있는 의무수입량을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늘리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의무수입량 증량 문제 이외에도 대만의 쌀 협상 사례에서 보듯이 추가적인 관세화 유예기간,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의 용도제한 등의 문제도 협상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방안이 유리한 것인지요?

– 사실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오래전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장 개방 폭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직접지불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이 확정되는 반면,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관세화시에는 과도한 의무수입량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 관세 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될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미국·중국 등 관심이 다른 국가들과 쌀 관세화 유예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각각의 국가들과 합의를 이룬 후, 이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관세화 유예로 간다고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주요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올해 쌀 협상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0일 WTO에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한 이후 미국·중국 등 상대국의 입장이나 동향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아직까지 협상 참가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온 국가는 없습니다만, 미국·중국 등 주요 참여 예상국들은 우리나라와의 쌀 협상에 대비하여 내부체제 및 입장을 정비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단체가 관세화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요?

–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는 이미 관세화 유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상대국들이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해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들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관세화'라는 카드를 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유예의 대가로 요구수준을 지나치게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은 서로의 의중을 숨긴 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우리 협상카드를 상대방이 이미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협상력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때문에 쌀 협상에서 공감대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세화냐, 유예냐 하는 명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협상 대표단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가 쌀 협상과 관련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기로 하셨는데, 그 준비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는 이번 쌀 협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쌀 협상 대책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T/F는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외협상을 수행하는 협상대책팀과 국내지원대책 수립 및 조정 역할과 협상진행상황의 효율적인 홍보를 담당하는 국내대책팀으로 구성되며, 농림부를 비롯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협상 이후 국내 쌀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개방 폭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DDA 협상이나 쌀 협상 결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단위면적당 소득률이 감소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쌀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수입쌀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정부수매제도의 개편과 취약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UR 이후 정부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규모화를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쌀농가의 평균 영농규모는 1ha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영규모화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UR 협상 이후 지속적인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전체 농가의 평균 경작규모는 1995년 0.9ha에서 2003년 1.1ha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3만4천호이던 3ha 이상 농가도 4만1천호로 늘어났고 전혀 없던 5ha 이상 농가도 1만3천호로 증가하는 등 규모화가 나름대로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규모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고령농의 경영이양 후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63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하는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대금과 함께 직불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화된 농지는 젊고 유능한 2~5ha 농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영농규모화사업을 두 배로 늘리고, 이자율 등 지급조건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고, 이들이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장개방 폭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지불제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부에서는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농업과 친환경농업과의 소득차이분을 지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는 WTO협정에 따라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중립직불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농

업의 친환경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의 외부효과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 개념의 저투입농법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작황 부진에 따른 쌀값 안정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속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보전수준과 납부금 수준을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행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농민들의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WTO 출범 이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로 추곡수매제 본래의 농가소득지지 및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향후 시장개방 폭 확대시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WTO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되고 있는 시가로 매입·방출하고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균형이 회복되어야 하고 수확기 매입물량 감소에 대응한 민간의 유통능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적정 벼 재배면적 유도, 재고처리 등 수급균형 회복과 함께 민간유통기능 확충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제의 구체적인 도입시기, 비축수준, 매입·방출 방법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수급균형 회복시기와 DDA 협상과 쌀 협상 등을 감안하여 농민·농민단체·관계전문가 등 각계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개방 폭 확대 이후 예상되는 시장경쟁 심화, 정부수매량 감축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WTO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대응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등 산지유통업체의 역할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민간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RPC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나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 경영능력 부족, 과당경쟁 등으로 RPC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DDA와 쌀 협상 등 쌀 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쌀 유통의 핵심체로 거듭나기 위한 RPC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RPC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 RPC와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 RPC에 정부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협 RPC는 사내분사제와 독립법인 설립 등을 통해 조합경영과 RPC경영을 분리하고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조·저장 시설을 집중 지원하여 2010년까지 수확기 벼 매입량을 1,100만석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야생화

얼레지



얼레지(Erythronium Japonicum DECNE)는 차전엽산자고(車前葉山慈姑) 또는 얼레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풀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심산지역 및 토심이 비옥한 산의 윗 부분 숲속 그늘에 군락을 이루고 자란다.

봄철에 꽃대가 나오는데, 꽃대에 한 개의 꽃이 달리고 밑을 향하여 피며 꽃잎 안쪽에 짙은 색의 W자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봄 산에서 가장 큰 꽃 중 하나이다.

남부지방에서는 3월 중순부터 그리고 그 위쪽 지방에서는 4~5월에 홍자색 꽃이 핀다. 백색 꽃을 피우는 흰 얼레지도 있는데 아주 귀하다. 5~6월에 열매가 익으며 벌어져 씨가 나온다.

꽃대 높이가 25㎝ 안팎이고 인경(鱗莖)은 땅속 30㎝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며 한쪽으로 굽은 모양이어서 골프채를 연상하게 한다. 그 밑 부분에 2개의 잎이 땅 위로 약간 누워 마주 달린다. 잎은 긴 잎자루가 있고 좁은 난형(卵形) 또는 타원형으로 길이 6~12㎝이고 너비 2.5~5㎝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지만 주름이 지며 표면은 녹색이지만 자주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얼레지는, 더운물에 데쳐서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나물로 먹기도 한다. 뿌리에는 녹말 성분이 많아서 예전에는 옷감에 먹이는 풀 대용으로도 많이 쓰였다.

글·사진 /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특 집

쌀 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6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 / 김성민
20 **쌀, 시장 개방의 현주소와 대책** / 안총기
23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절차와 주요 쟁점** / 김희상
26 **일본·대만, 사전 준비 정도가 희비 갈라** / 서진교
30 **미국 위협하는 중국 쌀 수출 잠재력-세계 쌀 산업 현황** / 최용규
35 **농업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 / 이태호
38 **'규모화'로 농업소득 증대를** / 사공 용

지난 UR 협상에서 인정받은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쌀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우리의 쌀 협상 전략과 쌀 산업 발전방안을 정책담당자 및 민간전문가들에게 들어본다. 〈편집자 주〉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주력



김성민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쌀 관세화 유예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할 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 방향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협상력 극대화와 사회적 혼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UR 농업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였고 2005년부터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올해중에 협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화란 그동안 수입제한되던 품목에 대해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자유화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와 동시에 국내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여 1995년에는 1%에 상당하는 쌀 5만1천t을 수입하였고, 올해에는 4%에 상당하는 20만5천t을 수입해야 한다.

관세화 유예 연장만큼 대가 지불해야

UR 협상에서 시장개방의 기본원칙은 관세화였다. 쌀 협상은 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시한만료에 따른 후속 협상의 성격을 갖는다.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국의 합의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를 하도록 농업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다.

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 조건을 협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쌀을 관세화로 전환하기로 한다면 굳이 이해당사국과 협상할 필요가 없이 농업협정문에 정해진 규정에 따른 관세율을 계산하여 제출한 후 회원국들로부터 일정기간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만약 관세화할 경우에는 기준연도(1986~88년) 관세상당치(TE)를 1995년도부터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UR 협상의 최소관세감축률(10년간 10%)을 가상적용(shadow reduction)하게 된다. 즉 2005년부터 관세상당치(TE)의 90%로 관세화하고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향후 관

세 감축이 적용되게 된다.

쌀 협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인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는 모두 장·단점이 있다.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화시에는 과도한 의무수입물량(MMA) 증량은 피할 수 있는 반면, 국제가격·환율 변동, 향후 관세감축 등에 따른 수입량 급변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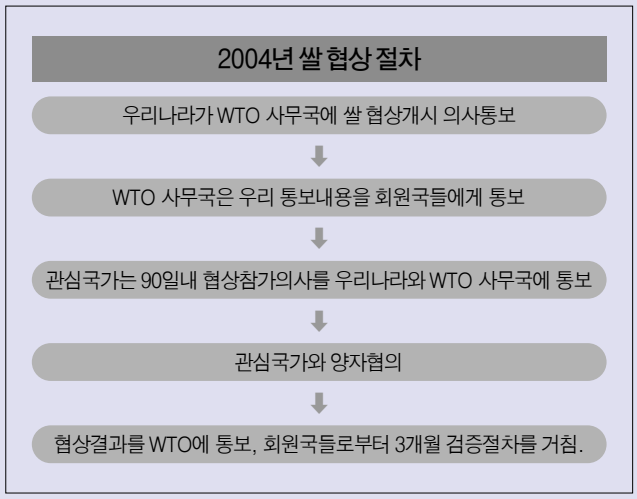
관세화 유예조건을 협의하는 쌀 협상은 관심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핵심이다. 미국·중국·호주 등 관심이 다른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각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개별 국가들과의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DDA 협상일정이 지연되어 2004년 세부원칙(modality)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DDA는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합의되어 출범되었으나 칸쿤 각료회의에서도 모델리티에 합의하지 못하는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 직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DDA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주요 그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올 2월 WTO 협상의장단이 구성되는 등 협상 재개 움직임은 있으나, 협상의 중심축인 미국(2004년 11월 대선)과 EU(2004년 5월 회원국 확대)가 국내 정치일정 등의 이유로 대외협상에서 신축성 발휘가 제한되어 협상 골격 합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초 협상시한인 올해말까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올해중에 쌀 협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협상의 기준과 대안선택의 기준이 될 DDA 세부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다.

〈그림〉 쌀 협상 절차



쌀 협상, 실리 확보에 역점

쌀 협상의 절차를 살펴보면, 농업협정문에는 '이행 마지막연도(2004년)에 특별대우(관세화 유예) 계속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 연도에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대만·이스라엘의 경우 관세화 전환 3개월 전까지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고 검증절차를 거쳤으나, 아직 관세화 유예 지속을 위한 협상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의사를 지난 1월 2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고, 관심국가들은 4월 20일까지 협상 참여의사를 통보해 오도록 되어 있다. 현재 미국·중국 등 주요 참여 예상국들은 쌀 협상에 대비하여 내부 체제 및 입장을 정비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으로 관심국들이 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이후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되며, 3개월간의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9월말까지 양자협의 종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쌀 협상의 주요 내용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의 협상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수입방법, 의무수입량 용도제한 문제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경영 안정 등으로 쌀 산업의 총체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쌀농사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제와 차별화된 유통체제를 갖춰 나가는 등 쌀 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들을 농업인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할 때보다 쌀 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 방향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협상대안간 신축성 유지를 통해 협상력 강화를 추구하고, 협상대안 비교 및 국내영향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쌀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최종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혼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 협상은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협상의 성격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의 확산과 '참여와 대화'로 협상대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칠레 FTA 비준과 관련한 일부 농민단체의 반발과 사회적 혼란에 따른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농업협상에 대한 농업인 및 농민단체의 불신을 극복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농민단체·농협·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쌀 협상 토론회·공청회 등의 개최로 쌀 협상 관련 주요 쟁점들을 진지하게 논의하며, 농업협상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고 열린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농업인·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쌀 경쟁력 제고 위한 쌀 산업 구조개편 추진

쌀 협상의 목적은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폭을 최대한 줄여 그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쌀 협상 결과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경우라도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이뤄 우리 쌀 산업의 총체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농사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제와 차별화된 유통체제를 갖춰 나가는 등 쌀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들을 앞으로 농업인들과의 계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쌀 전업농 육성

올해는 '7만호 쌀 전업농 육성'의 원년으로, 개방체제에 대비한 규모화사업 개편 등 전업농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다. 1995년 이후 선정해 온 8만6천호 전업농과 비전업농 중 규모·연령·영농의욕 등을 고려하여 7만호를 집중 육성대상자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3년 단위로 재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2~5ha 규모의 전업농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지원시 경영진단을 의무화하여 경영체별 경영능력을 배양하며, 쌀 협상 이후 쌀값 하락 여건에서도 전업농이 소득을 유지하면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쌀농가 소득안정 방안

쌀 협상에서 관세화하는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쌀값 하락이 우려되며, 관세화를 유예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MMA) 증량과 공급과잉기조 지속에 따른 쌀값 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쌀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폭 확대에 대응하여 쌀농가의 소득안전장치 확충이 필요하다.

논농업직불제는 생산·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직불제로 개편하고, 감축대상보조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시장개방 폭 확대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보험성격의 장치로 내실화할 것이다. 논밭으로 분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

하여 환경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혁신

시장개방 폭 확대 이후 시장경쟁 심화, 정부수매량 감축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나, 전체 농협 RPC의 45%인 90개소가 적자에 허덕이는 등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RPC 경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희망 RPC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RPC를 등급화하여 시설·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RPC, 자율통합신청 RPC 등을 중심으로 통합·합병을 추진하고, 농협 RPC는 조합경영과 분리하여 전문가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가격보다는 맛과 건강에 대한 적합성 등을 더욱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호 변화에 맞춰 고품질 쌀 생산체계와 차별화된 유통질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종자보급을 확대하고 재배관리의 표준화를 추진할 것이다. RPC를 고품질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포장양곡 표시제도 강화, 브랜드쌀 품질관리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유통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시중 유통쌀의 원료곡으로 사용되는 정부수매물량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2004년부터 수매품종 제한, 정부쌀 검사등급 다양화 등 수매·방출체제를 개편할 것이다.

추곡수매제도 개편

WTO 출범 이후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물량이 줄어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와 수급조절기능이 위축됨에 따라 현행 추곡수매제도를 WTO에서 허용하는 시가매입·시가방출방식의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비축물량, 매입·방출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고, 전문가·농업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여 개방에 대비할 계획이며, 시장기능 강화, 공공비축제의 도입근거, WTO 협정 등을 고려하여 현재 정부수매 중심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쌀의 관세화 유예나 관세화나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국제 쌀 시장의 수급흐름에 따라 그리고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각각의 영향은 상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농민·농민단체·소비자와 관련전문가들이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 토대 위에 협상이 추진되고 쌀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간다면 시장개방 폭 확대에도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의 현주소와 대책



안총기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정부는 올해 쌀 협상에서 우리 농민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농민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신뢰하고 정부 협상단이 오직 농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쌀은 우리에게 상품(goods)인가?

"쌀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주식 곡물이 아니다. 쌀은 수천년 동안 우리의 살과 뼈(flesh and bones)의 일부분이 되어 왔고, 이제는 한국인의 영혼과 정신(soul and psyche)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쌀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최근 외교통상부의 고위 관리가 유럽의 고위 외교관이 방한하였을 때 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내용이다.

쌀은 우리 한국인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천년 동안 우리의 주식이 되어 왔고 떡·과자·식혜·탁주 등 우리 문화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 한국전쟁 속에 극한의 굶주림을 겪으면서 식량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은 우리의 가슴속에 더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쌀의 특수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쌀이 또한 상품의 하나인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쌀은 팔고 사는 거래의 대상이고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 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은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도 값싸고 품질이 좋지 않으면 공산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점차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없다.

쌀은 지난 10년간 특별대우를 받아 왔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모든 농산물이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농산물이 본격적인 자유화의 대상이 될 것을 예고하였다. WTO 농업협정은 모든 무역제한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도록 하고 앞으로 관세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으로부터 쌀을 예외로 다루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쌀에 대해서는 10년간 이러한 관세화 원칙에서 제외되도록 별도의 특별규정(농업협정 부속서 5)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예외 조치였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협상팀이 엄청난 개가를 올린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WTO 농업협정에 반영되었던 쌀 관세화 예외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10년간 쌀을 관세화하지 않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대신에 소량의 쌀을 아주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쌀 수입물량은 농업협정이 발효되는 첫해인 1995년에는 국내 총소비량의 1%를 수입하고 이를 서서히 늘려서 이행기간의 마지막해인 2004년에는 총소비량의 4%를 수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약속에 따라 우리는 5%의 낮은 관세를 물리고 쌀 수입량을 서서히 증가시켜 왔다. 1995년에는 5만1천t, 2003년에는 17만9천t을 수입했고, 올해 2004년에는 20만5천t의 쌀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관세화를 유예한 10년은 우리에게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10년은 어느덧 쏜살같이 지나갔고, 우리 쌀의 경쟁력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관세화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농업협정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려면 올해중에 이해관계국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쌀 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목적으로 하는 협상이다. 관세화는 이미 농업협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관세화하려면 다른 나라의 의사를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농업협정은 부속서에 관세율(관세상당치)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화 유예 협상시한인 올해말까지 이해관계국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곧바로 관세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은 농업협정 부속서 해당규정과 앞서 언급한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리적 해석이다.

관세화 유예에는 함정도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위해 올해 1월 20일 쌀 협상 의사를 WTO에 공식 통보했다. 조만간 이해관계국의 공식 의사표명이 있게 되면 쌀 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농업협정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이해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추가적인 양허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해당사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쌀 협상은 결국 쌀 관세화 유예의 조건에 대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화 유예의 조건은 구체적으로는 우선 쌀에 대한 저율관세 수입물량의 증량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수출국들이 과도한 저관세 수입물량을 요구할 경우는 차라리 고율의 관세화로 가는 것이 쌀 산업과 우리 농민의 보호를 위해서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을 따지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들이 또 있다. 그중 중요한 한 가지는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수출국들에게 제시하는 저관세 수입물량은 나중에 관세화를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저율의 관세로 수입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농업협정은 우리의 4% 수입량은 앞으로 관세화를 하더라도 저율관세로 계속 수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체제가 계속된다면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앞으로 허용하게 될 저관세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미래에 우리가 쌀을 관세화하더라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또 한 가지는 관세화 유예를 하더라도 우리가 추후에 관세화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예상관세율은 계속 낮아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1995년에 관세화를 취했다면 부과할 수 있었던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의한 감축률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쌀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하더라도 미래의 관세율은 현재 진행중인 도하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계속 낮아지게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관세화를 유예하더라도 관세율 감축은 유예할 수 없으며, 장래에 결국 관세화를 취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쌀 산업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관세화 유예의 조건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출국들이 유예를 선호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와 함께 쌀 관세화를 유예한 일본은 1999년 유예 허용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관세화로 갔다. 또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 관세화를 유예했던 대만도 그 다음해 관세화 조치를 취했다. 관세화로 가는 것이 관세화 유예보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관세화 이후 쌀 수입 증가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관세화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막연히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해서 상당한 물량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쌀 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될지도 모른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우리 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찾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쌀 협상에서 우리 농민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쌀 협상은 전제조건 속에서 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협상이다. 우리 농민들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신뢰하고 정부 협상단이 오직 농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로서도 시장개방에 따르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쌀 수입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졌다. 최선의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한다 해도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일 뿐이고 머지않아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관세화를 유예하는 중에도 관세감축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계속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강력한 농업은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게 한다. 농업은 국민 식생활은 물론, 관광업·환경·국민의식구조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물론, 농민·소비자 모두가 협력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새로운 기업적 영농법 도입을 통해 생산단가를 인하하고, 품질개량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향이다. 이 어려운 과제를 위해 정부와 농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절차와 주요 쟁점



김희상 駐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2004년말에 끝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 1월에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한 협상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하였으며, 올해 안에 관세화 유예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을 끝내야 한다.

지난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최초로 농산물이 GATT체제에 편입되면서 그동안 각국이 농산물에 대해 적용하였던 각종 수량규제를 모두 관세화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협상 막바지에 한국·일본·필리핀의 쌀과 이스라엘의 낙농제품 및 양고기의 경우 관세화로부터 한시적인 예외를 인정받았다. 2002년 WTO에 신규가입한 대만의 경우도 가입의정서에 의거, 2003년말까지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았다.

이들 국가 중 일본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은 이미 관세화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만이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이하 쌀 협상) 개시 의사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쌀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전분야에 걸쳐 지니는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쌀 협상 절차 및 주요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이 중요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WTO 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관련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우리 정부 및 駐제네바 대표부의 공식입장과 무관합니다.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절차

WTO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잠정적인 관세화 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UR 농업협정 부속서5이다. 부속서5 제8조는 관세화 유예조치를 현행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말 이후에도 연장할지 여부에 관한 협상을 이행 마지막 연도(2004년)에 시작하여 같은 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WTO 사무국에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 의사를 통보하고 이해가 있는 국가들에 대해 90일 이내 협상참가 의사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이 협상의사를 통보하는 4월 하순 이후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적인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자적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협상결과를 일단 이들 국가들과의 양해록(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의 형태로 확정하고, 이를 다자화하기 위하여 합의내용이 반영된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C/S) 개정안을 WTO에 제출하고 90일간의 회원국 검정(verification)기간을 거쳐야 한다.

현행 협정 내용은 2004년말까지 협상을 종료해야 한다(shall be completed)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동 기간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검정절차까지를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협상 종료(주요국과의 MOU 체결 등)까지만 완료하면 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주요국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절차와 관련하여 그간 소위 '자동관세화' 여부 즉, 2004년 이내 협상 타결이 안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관세화되느냐의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우선 '자동관세화'는 표현 자체에 다소 어폐가 있다고 본다. 실제적인 관세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속서5의 첨부에 따라 관세상당치를 계산하여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개정안을 WTO에 제출해야 하고 회원국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협상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WTO 규범이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계속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서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 농업협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며 이는 농업협정 제4조2항에 명시되어 있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의 근거조항인 농업협정 부속서5는 이 제4조2항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조항이다. 따라서 부속서5에서 유예연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원칙인 예외 없는 관세화로 가야 한다.

결국 '자동관세화'라는 표현보다는 2004년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 관세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설명이다.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타 의무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WTO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관세화 유예연장에 따르는 추가 부담

우리가 쌀 관세화와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쌀 관세화를 유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인 효용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부담을 어떻게 잘 분석하여 비교하느냐일 것이다. 관세화 유예에 따른 국가적 효용 측면은 여러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 또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WTO 규정을 중심으로 관세화 유예에 따르는 부담 측면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적인 양허

우선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가적인 양허이다. 부속서5의 제9조는 협상 결과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경우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UR 협상시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10년간 국내 소비량(1986~88년 기준)의 4%까지를 최소수입물량(이하 MMA)으로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의 경우 20만5천t의 쌀을 수입할 예정으로, 이러한 MMA 허용은 현재 우리나라의 쌀 수급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대만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특혜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소비량의 8%까지 MMA를 허

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담이 일본과 대만이 조기에 관세화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물론 현 단계에서 협상의 결과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협상대상국들은 일단 관세화 원칙수락을 요구하면서 유예를 추진할 경우 현재 MMA 물량 이상의 수입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은 추가적인 양허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쌀 이외의 분야에서의 추가 양허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Shadow reduction

부속서5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관세화를 유예한 품목을 관세화할 경우 UR 협상 최초 이행연도인 1995년에 관세화를 해서 매년 최소 감축률로 관세를 감축했다고 상정하여 관세화 연도에 해당하는 관세율로 관세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소위 'shadow redu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005년에 관세화할 경우를 가정하면, 1995년에 관세화를 했을 경우 관세상당치가 A라면 10년간 10%만큼 감축한 것으로 상정하여 2005년에는 A%로 관세화하는 것이 아니라 0.9×A%로 관세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shadow reduction 제도가 유지된다면 우리가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경우 관세화 시기가 늦어질수록 궁극적으로 관세화할 당시의 최초 관세화 수준이 낮아져 외부충격에 대한 방어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DDA 협상의 결과 각국 농산물에 요구되는 최소 관세감축률이 커질수록 이러한 부담도 더 커지게 된다.

관세화 이후 MMA 유지

부속서5 제7조(a)에 따르면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MMA를 허용했을 경우 관세화 연도의 MMA 수준은 해당국의 이행계획서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이후 관세화를 한다고 해도 국내 소비량의 4% 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의 수입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쌀 협상에서도 협상 상대국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최종 합의안에 반영될 경우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쌀 또는 기타 분야에서 추가적인 MMA를 허용한다면 향후 관세화를 한 뒤에도 계속해서 MMA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도 정책결정 및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고려, 가능한 대응논리 개발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초 2003년 3월 31일까지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을 마련하고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 이전에 회원국들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던 DDA 농업협상 일정이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현재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등 미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두 협상은 전혀 별개의 협상이지만 실제로는 쌀 협상의 상대국들이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요구할 내용들이 상당부분 DDA 농업협상에서 합의될 세부원칙들에 기초할 것이므로 양 협상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구체적인 협상목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DDA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상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대만, 사전 준비 정도가 희비 갈라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ksuh@krei.re.kr)

일본은 관세화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사전에 2년여에 걸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관세화를 이루어냈다. 특히 전국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년에 걸쳐 의견을 집약하여 관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政·官·農 3자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이 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월 20일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쌀 수입 방식을 결정하게 될 쌀 협상의 개시의사를 WTO에 공식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5월초부터 쌀 수출국과 본격적인 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우리보다 앞서 쌀 협상을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협상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관세화로 의무수입량 증량 폭 반으로 줄여

일본이 쌀 수입을 관세화로 전환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MMA)이 일본 농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당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에 걸쳐 연속 쌀 풍작을 맞아 1997년말 쌀의 재고가 390만t에 달해 국내 소비량의 40%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쌀의 생산조정 면적은 매년 늘어나 1998년에는 100만ha에 육박하여 일본 논 면적 전체의 36%가 생산조정되고 있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1995년부터 쌀의 의무수입량(MMA)이 국내에 들어와 서서히 그 양이 늘어나면서 의무수입량 자체의 과잉재고가 40만t을 육박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관세화 유예를 통해 의무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그것은 일본 농업이 떠안을 수 있는 부담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자체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관세화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다. 특히 유예기간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의무수입량의 증가폭을 0.8%에서 0.4%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관세화 검토 이유 중의 하나이다.

두 번째는, 고율 관세 부과로 추가적인 쌀 수입이 상당 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본의 경우 의무수입량 중 일정 부분은 동시매매입찰(SBS)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져 실제 수입쌀이 국내시장에 국내산 쌀과 경쟁하면서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쌀이 수입쌀과 경쟁할 수 있는 관세수준의 실질적 계산이 가능하였고, 이것은 1998년 기준으로 kg당 160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에 따라 기준기간(1986~88년) 평균 국내외 가격차는 kg당 350엔으로 계산되어 관세화를 한다고 해도 향후 25년간 본격적인 쌀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자체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또한 추가적인 양보를 강요당하는 관세화 유예보다 관세화가 일본에 보다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대비로 관세화 전환 성공

일본이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것을 고려한 것은 1997년부터라고 판단된다. 일본의 전국농협중앙회(이하 전중)에서 내부적으로 관세화를 검토한 때가 1997년 가을로 알려져 있고, 이듬해인 1998년 봄 관세화로의 전환을 농림수산성에 건의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관세화 고려는 1997년초나 그 이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전중의 관세화 전환 검토 발표 이후 농림수산성에서 이를 공식 검토하였고 결국 1998년말에 政(자민당)·官(농림성)·農(전중) 등 3자 대표로 구성된 'WTO 농업 문제 3자회의'에서 관세화로의 전환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98년 12월 21일 WTO 사무국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거쳐 1999년 4월 1일 쌀의 관세화를 단행했다.

일본의 관세화 내용을 보면 먼저 관세화 이행 시기는 1999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999년 4월 1일로 설정했다. 쌀의 관세는 기준기간(1986~88년) 동안 태국산 쌀을 중심으로 한 수입가격(32엔/kg)과 같은 기간 내에 소비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던 상품 도매가격(434엔/kg)과의 차이인 402엔/kg을 기준으로 1999년 적용세율은 여기에서 12.5% 감축한 kg당 351엔/kg으로 설정하였다. 의무수입량은 1999년 기준인 72만4천t에서 2000년에는 76만7천t(현미 기준)으로 유예가 계속되었을 경우의 약속물량인 85만2천t보다 8만5천t 줄어들었다.

일본의 관세화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국가는 호주·EU·브라질·우루과이 등 4개국이었다. 호주는 일본의 관세 상당치 산정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1개월 후에 철회하였다. 우루과이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으나 결국 일본의 일관된 설득 즉, 쌀의 관세 상당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전환'한다는 WTO 협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협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따라 결국 이의 제기를 철회, 일본의 관세화는 최종적으로 2002년 7월에 공식 발효되었다.

관세화 전환 이후 일본은 높은 관세 상당치를 최대한 이용하여 WTO 농업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입이 국내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의무수입량에 대해서 국영무역을 유지, 주로 가공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는 일본산과 함께 원조용으로 충당하는 등 신규수요에 충당하도록 재고가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의무수입량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쌀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1999년 이후 매년 100~225t 안팎의 수입에 불과, 사실상 상업적 수입은 차단되고 있어, 현재로서 일본의 관세화로의 전환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쌀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일본의 고급쌀을 중심으로 수출도 증가하는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상업적 수출은 현재까지 주로 대만·미국·홍콩·싱가포르·중국 등에 한하여 소량이기는 하지만 2001년 231t에서 2002년 538t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조건, 특히 쌀 관세화 유예로 초래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무수입량의 시장방출로 쌀 가격이 급락했다는 점 등은 사전에 관련 쌀 정책의 정비 등 철저한 준비·대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대만의 경우〉

WTO 가입시 관세화 유예 조건을 간과

2002년 WTO에 가입한 대만은 1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국내소비량의 8%(14만4,720t, 현미 기준)를 의무수입량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의무수입량의 관리에 있어서 전체의 35%를 민간에서 수입하되 연내 반드시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이와 같은 관세화 유예 조건에 대해 대만의 자체 평가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 직전 대만의 쌀 수입량은 연간 7천t 수준으로 그것도 일부 수출용/가공용에 불과해 사실상 상업적 쌀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의 조건으로 연간 14만t에 달하는 의무수입량이 국내시장에 유입될 경우 그 파급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WTO에 가입한 2002년초 대만의 쌀 가격은 21~23NT/kg에서 2002년 4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해 2002년 10월에는 생산비인 약 16NT/kg보다도 낮은 15NT/kg까지 떨어져 연초 대비 약 25%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쌀의 긴급수매로 가격을 지지하는 한편 그동안 실시해 왔던 생산조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WTO 가입에 따른 일련의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실시하였다. 이러는 사이 다시 관세화 유예 지속 여부에 대한 협상을 요청받자 대만은 심각하게 관세화를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화 유예 연장의 조건으로 대만에게 매년 2%씩 의무수입량 증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 수준의 의무수입량 14만5천t(1990~92년 평균 소비량의 8%)만으로도 그동안 쌀 소비가 줄어 2002년 기준으로 보면 그 비중이 12%에 육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 가격이 폭락해 정부수매와 휴경면적 확대 등 긴급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대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년 2% 증량이란 수용 불가능한 수준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반면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DDA 농업협상의 추이로 볼 때 적어도 2005년 또는 그 이상까지 의무수입량을 동결할 수 있으며, 설령 의무수입량을 넘어선다고 해도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고 자체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관세화방식을 따라서 수입가중의 최저가인 베트남의 수입가격인 8NT/kg을 적용하여 쌀의 관세 상당치를 계산할 경우 관세화해도 수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대만은 2002년 9월 30일 WTO 사무국에 2003년 1월 1일부터 쌀의 관세화로의 전환을 통고하면서 쌀의 관세 상당치로 53NT/kg에서 15%를 감축한 45NT/kg를 종량세(종가세로 환산하면 약 475%)로 통보하였다. 의무수입량은 전과 동일한 14만4,720t으로, 이 중 35%에 대해서는 민간이 수입하도록 허용하되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세화 이후 대만의 쌀 수입은 의무수입량 이내에서만 이루어져 일단 수입 측면에서는 대만의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쌀 가격은 2002년 10월 15NT/kg까지 하락한 이후 정부수매와 휴경 확대로 소폭 상승하여 2003년은 생산비와 유사한 16.1NT/kg인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사전 쌀 정책의 정비와 철저한 준비가 중요

일본과 대만의 쌀 협상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관세화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사전에 2년여에 걸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인 관

세화를 이루어냈다. 특히 생산자단체인 전중을 중심으로 1년에 걸쳐 의견을 집약하여 관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政(민자당)·官(농림수산성)·農(전농) 3자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비용이 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세화에 대비하여 쌀 정책을 정비한 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일본은 쌀 관세화의 전제조건으로 1997년 11월 '새로운 쌀 정책대강'을 통하여 쌀 정책을 개혁하였다. 관세화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도작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또한 정부미 재고누증에 대응하여, ①정부매입량보다 매도량을 증대하고 ②실제 매도량이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을 다음해 정부 매입량에서 공제하는 등 쌀 유통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쌀 수급의 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대만의 경우 사전에 WTO 가입조건, 특히 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초래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의무수입량의 시장방출로 국내 쌀 가격이 급락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우리의 쌀 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우리나라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관세화 유예든 관세화든 사전에 관련 쌀 정책의 정비 등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비무환의 평범한 진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순간이다.

용어해설

매칭펀드(matching fund)

투자신탁회사가 국내 및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신사의 매칭펀드를 통한 간접적 투자방법에 의해 외국인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시장의 육성과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 3월부터 국내 투신사에 매칭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허용했다. 이러한 펀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되 일정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할 수 있는 단위형으로, 국내증권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증권투자를 병행함으로써 국내통화 증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재정용어로는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학에서는 공동자금 출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미국 위협하는 중국 쌀 수출 잠재력
- 세계 쌀 산업 현황 -



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장
(choiyk@gapi.re.kr)

쌀은 옥수수·밀 등 다른 곡물과 비교하면 교역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7% 수준으로 매우 낮다. 지난해 세계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100만t이 줄어든 2,690만t으로 추정되며, 국제 쌀 가격은 2001년 이후 최근 1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美 캘리포니아産 중단립종의 경우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80년 심한 냉해로 쌀 생산의 3분의 1이 줄어들어 세계 중단립종 연간 거래량에 가까운 220만t을 수입한 바 있다. 당시 중단립종 가격이 350달러/t 수준이었다가 우리의 구매로 급등하여 540달러/t이나 지불하여 생산부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기도 하였다. 그나마 다행히도 당시 일본이 700만t에 가까운 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제 우리의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이 재개되어 올해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둘러싼 국제 쌀 산업의 동향과 함께 우리의 주요협상 상대국이 될 미국·중국·호주 등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쌀 생산, 3년 연속 감소 속 올 2% 증가 예상

2002/2003년(2002. 8. 1~2003. 7. 31)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3억8,180만t(정곡 기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6/199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쌀 생산량은 1999/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인 4억930만t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3년 연속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03/2004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3억8,930만t으로 추정된다.

한편 벼 재배면적은 2000/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1/2002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02/2003년에는 인도·파키스탄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하여 재배면적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1995/1996년보다 적은 1억4,714만ha를 기록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3,900kg/ha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 5억7,628만t(조곡 기준)이었다. 따라

서 2002/2003년 생산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1999/2000년의 6억1,128만t에 비하면 94% 수준이었다.

세계 쌀 생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토지·소비·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쪽의 파키스탄에서 동쪽의 필리핀까지가 세계 쌀 생산의 절반을, 여기에 한국·일본·중국의 동아시아 3국을 합하면 세계 쌀 생산의 약 90%를 차지한다.

2002/2003년 쌀 생산이 감소한 이유는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이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위 생산국인 인도가 가뭄으로 전년 대비 15%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호주·파키스탄과 한국·일본·필리핀·브라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태국·미국·베트남 등 수출국과 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등 수입국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3/2004년 쌀 생산량이 2002/2003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인도의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전체의 쌀 기말재고량은 2002/2003년이 전년 대비 20% 줄어든 1억610만t으로 이는 1999/2000년 이래 3년 연속 감소하는 결과로 1987/198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처럼 기말재고량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반 이상이 중국의 기말재고량 감소 때문이며 여기에 인도도 전년 대비 40% 줄어든 1,390만t이 예상된다.

한편 2003/2004년 세계 전체의 소비량은 사상 최고수준인 4억2,13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동 기간 쌀 생산량이 3억9천만t 이하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2003/2004년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8,280만t으로 1983/198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역량 증가·생산 감소에도 불구 국제 쌀 가격은 최근 15년래 가장 낮은 수준

세계 전체의 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1999/2000년 이래 생산량이 3년 연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국제 쌀 가격은 2001년 이후 최근 15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일본·한국·대만의 2003년 작황이 나빠지자 캘리포니아産 중단립종의 가격이 2002년 11월 281달러에서 2003년 11월 534달러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도 이와 같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장립종의 경우 2002년 7월까지는 태국정부의 쌀 수출규제로 국제가격이 약간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2년 가을부터 대풍작을 기록한 인도가 쌀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약세로 전환되고, 2003년 봄에는 5~10% 정도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2002/2003년 쌀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후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세계 쌀 교역량은 2,690만t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년 교역량 2,790만t에 비하여 100만t이 줄어든 수준이다. 그리고 쌀을 옥수수·밀 등 다른 곡물과 비교하면 교역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7% 수준으로 매우 낮다. 이와 같은 교역량 감소는

〈표 1〉 세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재배면적(100만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조곡,100만t)
1995/1996년	149.43	3,660.2	546.92
1999/2000년	153.31	3,987.4	611.28
2000/2001년	153.86	3,916.6	602.60
2001/2002년	151.23	3,952.8	597.79
2002/2003년	147.14	3,916.4	576.28

자료 : FAOSTAT Database

〈표 2〉 국제 쌀값 동향

(단위 : $/t, FOB)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2. 11	2003. 11
미국 중립종	396.75	500.56	431.70	294.34	289.05	281.09	534.62
태국 장립종	373.18	255.60	211.68	178.13	178.80	179.68	199.00

주 :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품, 태국 장립종 1등품
자료 : 농림부

중·단질미 수출여력 측면에서는 미국·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한편, 가격 측면에선 중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립종의 국제 교역시장이 엷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쌀 협상 결과가 관세화냐 유예냐에 따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체제도 변하게 될 것이다.

세계 1, 2위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의 2002/2003년 쌀 생산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2004년도 쌀 가격은 인도·미국의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교역량도 100만t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세계 쌀 수입량은 2,700만t으로 추정되며, 주요 쌀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고물량 등으로 2003년 수입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밖의 지역에서 브라질·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EU·러시아·예멘 등의 쌀 수입량이 늘어나고, 인도네시아·이란·이라크 등의 수입량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세계의 쌀 교역량을 품종별로 구분하면 장립종 쌀이 전체 교역량의 75% 이상, 중단립종이 11%, 향미가 9%, 찹쌀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선호하는 중단립종의 1년 교역량은 300만t 수준으로, 아주 '엷은 시장'(thin market)을 형성하고 있어 주요 수입국들의 작황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주요 쌀 수출국 가운데 태국·인도·파키스탄은 장립종 쌀과 소량의 향미를 수출하고, 미국은 장립종과 중단립종 모두를, 호주는 중단립종만 수출하고 있다. 한편 주요 수입국 가운데 인도네시아·필리핀·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 등은 주로 장립종 쌀을 수입하고, 한국·일본·터키·요르단 등은 중단립종 쌀을 그리고 미국·EU·중동 지역에서는 향미를 수입하고 있다. 중단립종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중국·호주 3개국 정도이며, 최근 태국이 북부지역에서 중단립종 생산시험을 거쳐 일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지난해 쌀 수출량 6% 증가

2002/2003년 미국의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약간 감소한 678만t으로 추정되며,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320만에이커로 주로 남부지역의 면적 감소에 기인한다. 2003년 쌀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320만t으로 국내 소비량도 사상 최고수준인 400만t, 기말재고량은 전년과 비슷한 125만t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알칸사스·캘리포니아·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텍사스의 6개 주가 미국 쌀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재배는 알칸사스로 2002/2003년 재배면적이 152만에이커이며, 텍사스 20만6

〈표 3〉 미국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재배면적(100만에이커)			생산량(조곡, 100만cwt)		
	장립종	중단립종 (%)	전 체	장립종	중단립종 (%)	전 체
1995/1996년	2.31	0.78(25.2)	3.09	121.73	52.14(30.0)	173.87
1999/2000년	2.72	0.79(22.5)	3.51	151.86	54.16(26.3)	206.03
2000/2001년	2.19	0.85(28.0)	3.04	128.76	62.12(32.5)	190.87
2001/2002년	2.70	0.62(18.7)	3.31	165.33	47.72(22.4)	213.05
2002/2003년	–	– (–)	3.21	157.51	54.51(25.7)	212.01

주 : 1cwt = 조곡 0.0453t = 정곡 0.032t
자료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표 4〉 미국의 쌀 수출량 변화

(단위 : 천t)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세계 수출량	20,800	19,700	18,818	27,670	24,941	22,846	24,442	26,589	26,614
미국 수출량	2,993	2,625	2,304	3,156	2,644	2,847	2,541	3,100	3,200
비 중 (%)	14.39	13.32	12.24	11.41	10.80	12.46	10.40	11.86	12.02

자료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천, 미주리 20만, 미시시피 24만5천, 루이지애나 54만에이커이고, 캘리포니아는 전년보다 5만에이커 늘어난 52만3천에이커이다.

품종별 재배현황을 보면 알칸사스 등 중남부 대부분의 주가 장립종을 재배하고 있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중단립종은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2002/2003년 쌀을 품종별로 보면 장립종 쌀이 전년대비 5% 감소한 504만t이며 중단립종은 14% 증가한 174만t이다.

미국이 세계 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으로 1995년에는 299만3천t을 수출하여 14.4%, 2003년에는 320만t을 수출하여 12%를 차지하였다.

이를 품종별로 보면 장립종 쌀이 79%, 중단립종이 2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단립종 쌀 수출의 최대 시장은 일본이며, 한국에는 2001년부터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기준 한국·일본·대만에 수출한 중단립종 쌀이 미국 쌀 수출량의 12%인 46만t이었다.

중국, 품질·가격 경쟁력 제고로 미국 위협

쌀은 중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식량작물로, 곡물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총인구의 60% 이상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총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지만 장립종 쌀은 재고가 누적되는 반면 품질이 높은 중단립종은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관세할당으로 2004년에는 532만t을 수입(장립종 50%)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가격이 중국내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1980년대 이래 세계 벼 재배면적의 23%, 쌀 생산량의 37%를 차지한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다. 1997/1998년 조곡 기준 2억280만t 생산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2/2003년 1억7,660만t을 생산하고 있다.

재배면적도 1997/1998년 3,200만ha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2/2003년에는 2,800만ha로서, 이는 장립종 쌀에 대한 정부 수매 중단으로 장립종 재배면적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 반면 중단립종은 동북 3성과 양자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벼 재배면적에서 중단립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 11%, 1990년 16%, 2000년 29%로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동북 3성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5%씩 증가하였다. 동북 3성의 쌀 재배가 늘어난 것은 첫째는, 국내 쌀 가격상승과 둘째는, 1995년 이후 한국·일본의 쌀 수입에 따른 수출 수요 때문이다.

중국의 쌀 수요는 1인당 평균 소비량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쌀 소비패턴이 고품질·고영양품을 선호하고 있어 중단립종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중단립종은 미국·일본산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졌으나, 최근 품종 개량과 동시에, 일본·독일 등의 최신 도정기계의 도입 등으로 고품질화하고 있으며, 낮은 인건비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어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중단립종의 수출은 1999년 53만t, 2000년 58만t, 2001년 35만t으로 일본·한국·대만 등을 상대로 확대 추세에 있어 동종의

〈표 5〉 중국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재배면적(100만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조곡, 100만t)
1995/1996년	31.107	6,021.0	187.30
1997/1998년	32.129	6,311.1	202.77
2000/2001년	30.301	6,264.2	189.81
2001/2002년	29.144	6,152.4	179.30
2002/2003년	28.177	6,265.9	176.55

자료 : FAOSTAT Database

〈표 6〉 동북 3성의 쌀 생산량

(단위 : 만t)

	헤이룽장성	리오닝성	지린성
1994년	316	293	410
1995년	262	296	470
1996년	339	347	636
1997년	286	376	861
1998년	379	385	923
1999년	415	401	944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1 MMA 수입쌀 도입백서」

주수출국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및 유기농 쌀의 재배까지 확대하여 주요 수입국들의 안정성에 맞추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국내 쌀 가격의 12~15% 수준밖에 되지 않아 관세화시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다.

호주, 총생산량 중 85%를 일본·중동 등에 수출

1950년대부터 호주의 쌀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2001/2002년부터 2년 연속으로 감소하여 2002/2003년 호주 쌀 생산량은 정곡 기준 75만t에 불과하다. 호주의 쌀 재배농가는 2,500호에 불과하며 경지면적이 호당 400ha라고 하나, 5~7년 주기로 윤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재배면적은 호당 60~80ha 수준이다. 품종별로는 중단립종이 80%, 향미를 포함한 장립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쌀 재배는 New South Wales 주의 라베니라 평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개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총 재배면적은 2001/2002년 17만7천ha에서 2002/2003년에 15만ha로 감소했다. 따라서 세계 최고 단위당 생산량을 갖고 있어도 한정된 면적에 생산량은 2001/ 2002년 조곡 기준 164만3천t, 2002/2003년 127만5천t이다.

호주는 생산한 쌀의 15%만 자국에서 소비하고, 85%를 일본·중동·홍콩 등에 수출한다. 1999/2001년 사이에 매년 60만t 정도 수출하였으나 2002/2003년에 50만t 이하로 줄어들었다. 쌀 수출은 쌀 생산자들이 설립한 SunRice社가 독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쌀 산업현황과 함께 우리 쌀 재협상과 관련된 중·단질미 수출국가인 미국·중국·호주를 살펴본 결과, 수출여력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한편, 가격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립종의 국제교역시장이 엷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쌀 협상 결과가 관세화냐 유예냐에 따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체제도 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생산체제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7〉 중국 쌀 수출량 변화

(단위 : 천t)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세계 수출량	20,800	19,700	18,818	27,670	24,941	22,846	24,442	26,589	26,614
중국 수출량	32	265	938	3,734	2,708	2,951	1,847	1,750	2,250
비중 (%)	0.15	1.35	4.98	13.49	10.86	12.92	7.56	6.58	8.45

자료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표 8〉 호주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재배면적(천ha)	ha당 생산량(kg)	생산량(조곡, 천t)
1995/1996년	118.89	8,544.1	1,015.8
1999/2000년	151.70	9,161.5	1,389.8
2000/2001년	133.30	8,257.3	1,100.7
2001/2002년	177.00	9,282.5	1,643.0
2002/2003년	150.00	8,500.0	1,275.0

자료 : FAOSTAT Database

〈표 9〉 호주의 쌀 수출량 변화

(단위 : 천t)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세계 수출량	20,800	19,700	18,818	27,670	24,941	22,846	24,442	26,589	26,614
호주 수출량	519	562	641	547	667	617	618	400	500
비중 (%)	2.50	2.85	3.41	1.98	2.67	2.70	2.53	1.50	1.88

자료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2003.*

농업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



이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aglee@snu.ac.kr)

이번 쌀 협상에서 한국의 농업인과 정부가 원하는 것이 외국의 쌀이 무분별하게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국내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협상의 방향은 최대한 쌀 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식량사정과 쌀 시장을 이해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서 한국에게 약속되었던 10년간의 쌀 수입 관세화 유예 기간이 올해로 만료된다. 한국은 지난 1월 20일 쌀 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해 당사국들은 올해 안에 한국 쌀 수입의 관세화 여부를 협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쌀은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식량이고, 농가 농업소득의 절반을 제공하며, 국토의 상당부분을 경작지로 차지하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문화와 지역환경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번 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엷은'(thin) 세계 자포니카 쌀 시장은 한 나라의 사소한 무역정책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이번 쌀 협상에 주요한 이해 당사국이라고 생각되는 각 나라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쌀 협상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가격, 중국이 가장 낮아

먼저, 수출국 현황을 살펴본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아칸소·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 등의 주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5개 주의 자포니카쌀 수출 가능량은 연간 60만t 정도라고 생각된다. 한국에 수출할 만한 자포니카쌀을 재배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다.

캘리포니아는 특유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일조시수가 높고 병충해가 적어 품질이 우수한 쌀을 안정되게 생산하고 있으며 1ha에서 6t 정도의 쌀(정곡)을 수확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면적은 1980년경에 24만ha까지 증가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평균 20만ha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논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생산량이 증가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국 정부는 쌀 생산 농민에 대한 보조로 지출되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하여 미국산 자포니카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t당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가격) 수출가격은 약 350~400달러 정도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쌀은 주로 동북 3성(흑룡강성·요녕성·길림성)에서 생산되고 있다. 동북 3성은 최근 중국 최대의 곡물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의 자포니카쌀 생산량은 과거 10여년간 꾸준히 계속된 중국 정부의 증산정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특히 흑룡강성에는 막대한 양의 쌀 재고가 누적되어 있다고 한다. 동북 3성의 현재 쌀 생산면적은 약 280만ha 정도이며, 확장가능 면적은 물 공급량 제한을 감안해 볼 때에 40만ha 내지 60만ha 정도라고 추산된다.

중국의 자포니카쌀 수요는 최근 소득 증가와 함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자포니카쌀 수출 가능량은, 파악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쌀과 비슷한 품질의 중국 쌀의 t당 FOB 수출가격은 약 300~350달러 정도이다.

〈표 1〉일본의 국가별 쌀 수입량

	호주(%)		중국(%)		미국(%)		총계 (천t)
	SBS	계	SBS	계	SBS	계	
1995년	18.1	21.3	22.3	7.9	53.4	47.4	409
1996년	5.3	17.4	23.2	8.6	64.2	46.2	466
1997년	5.7	15.7	25.2	8.1	62.9	50.1	544
1998년	12.1	16.1	51.6	11.4	30.4	47.7	632
1999년	12.2	16.0	52.2	11.7	30.7	47.9	653
2000년	11.9	15.6	44.4	12.7	38.6	47.7	693
2001년	8.5	14.7	65.7	17.8	25.2	47.7	680

주 : SBS는 업체간 자율거래(Simultaneous Buy and Sell)를 뜻함.
자료 : *USDA Rice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ERS/USDA (November 2002)

마지막으로, 호주는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지역에서 자포니카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심각한 물부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약 90만ha이고 연간 생산능력은 60만t, 수출 가능량은 20만t 정도로 추산될 수 있으며 앞으로 생산 확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쌀의 t당 FOB 수출가격은 약 450~500달러 정도이다.

한편 수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쌀 소비 감소로 쌀의 재고가 늘어나게 되자 최소시장접근(MMA : Minimum Market Access) 의무수입물량을 줄이기 위해 1999년 쌀 수입 관세화를 단행하였다. 관세화를 유예하면 쌀이 남아돌아도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증가시켜야 하지만 관세화를 택하면 관세쿼터(TRQ : Tariff Rate Quota) 만큼만 수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관세쿼터도 증가시킬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접근 수입물량만큼 증량의무가 강하지는 않다.

일본의 쌀 소비량은 연간 약 900만t이며, 현재 관세쿼터량인 68만t만을 매년 수입하고 있다. 〈표 1〉을 보면 일본 수입량의 일정비율(약 50%)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호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의 경우는 자유시장거래의 성격이 강한 업체간 자율거래(SBS : Simultaneous Buy and Sell) 경로를 통하여 유통시키는 물량을 증가시키는 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쌀은 오히려 업체간 자율거래 경로를 통하는 양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일본의 쌀 수입이 자유시장거래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대만은 관세화 유예를 고수하였으나, 역시 일본과 같은 이유로 2003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대만의 연간 쌀 소비량은 110만t 정도이며, 현재 약 15만t의 관세쿼터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연간 쌀 소비량은 500만t 정도이며, 2004년의 MMA 의무수입물량은 약 20만t이다.

중국의 수출 잠재력 활용하여 미국과 협상해야

국제 쌀 시장상황이 위와 같다고 할 때, 어떤 전략으로 쌀 재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논리의 전개를 쉽게 하기 위하여 앞에서 파악한 각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상적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자. 일본·대만·한국의 최소수입량이(MMA에 의한 것이든, TRQ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각각 68만t·15만t·30만t이라고 하고 미국과 호주의 수출 가능량이 각각 60만t과 20만t이라고 하면 〈표 2〉와 같은 수출입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수입량을 소비량의 6%인 30만t으로 가정하였다. 물론 〈표 2〉는 무수히 많은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

〈표 2〉에서는 대만과 중국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0으로 하였다. 표에 의하면 세계 자포니카쌀의 총교역량은 113만t으로 미국·호주의 수출 가능량은 모두 수출되며, 한국·일본·대만의 최소수입량도 모두 충족되는데, 이와 같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족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나라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따라주어야 한다.

따라서 〈표 2〉가 나타내는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상당한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출국 쌀의 FOB 가격은 호주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중국의 순서이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가능량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표 2〉의 세계 자포니카쌀 총교역량 113만t을 초과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즉, 관세화가 완전하게 진전되어 쌀 무역의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게 된다면, 다시 말해 가격경쟁력만 따진다면, 중국만이 한국에 쌀을 수출할 수 있고 미국과 호주는 전혀 수출할 수 없을 것이다.

〈표 2〉 주요국 수출입 시나리오

(단위 : 만t)

	미 국	호 주	중 국	수입량 합계
일 본	34	10	24	68
대 만	10	5	0	15
한 국	16	5	9	30
수출량 합계	60	20	33	113

미국이 한국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쌀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수입방식 즉,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의 TRQ 수입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원하는 것도 정부가 쌀 수입량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쟁력 제고가 협상보다 더 중요

이번 쌀 협상에서 한국의 농업인과 정부가 원하는 것이 외국의 쌀이 무분별하게 국내시장에 유입되어 국내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협상의 방향은 최대한 쌀 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중국의 식량사정과 쌀 시장을 이해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전략일 뿐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확실한 것은 협상으로 한국의 쌀 농업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협상은 우리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줄 수 있을 따름이다. 현재 쌀 협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협상을 너무 중요시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

협상보다 중요한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쌀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국내 이견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된다면 협상 대표단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규모화'로 농업소득 증대를



사공 용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sakong@ccs.sogang.ac.kr)

농가소득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규모화'이며, 개방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규모화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저소득 농가의 소득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모화를 위해서는 쌀 가격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줄이고, 생산과 연계되어 탈농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각종 보조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의 결과로 지금까지 우리 쌀은 관세화 유예를 받아 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의 상황은 이행기간말인 2004년에 관세화 유예를 지속시킬지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관세화 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부속서 5)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시키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올 1월 WTO에 통보하였고, 우리 쌀 시장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중국·호주·태국 등과 양자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을 진행할 필요도 없이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방화를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관세화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협상개시 의사를 통보한 것이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아닌 고통이 따르는 '수술'이 필요

협상과정에서 관세화 유예를 받는 반대급부로 쌀 수출국들이 의무수입물량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면 관세화하고 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방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선에서 관세화 유예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관세화 유예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에 적용될 관세는 DDA 협상결과에 따라 암묵적으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지금까지와 같이 의무수입

물량을 가공용만으로 방출하고 동시에 과다한 정부재고로 가격을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관세화 유예를 주장한다면 관세화하는 것이 미래 쌀 산업을 위해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관세화 유예가 끝난 다음에는 더 큰 충격을 일시에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관세화가 되었을 때 국내 쌀 산업에 불어닥칠 수 있는 과다한 충격을 관세화 유예를 받으면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세화 유예를 주장한다면 이는 일리가 있고, 미래 우리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쌀 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국내 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의 문제는 시장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통제가 아니라 고통이 따르는 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표심에 얽매여 있는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로 진통제만 투여하였다. UR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더 많은 고통이 따르는 수술이 요구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저소득 농가 소득지지 필요하나 '규모화'가 근본적인 농가소득 제고방안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소득이 낮고,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5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5%였으나 그 이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어 2002년에는 7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쌀 협상이 어떠한 형태로 타결되건 간에 현재와 같은 농업구조를 유지하고서는 앞으로도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들로 정부가 농민들의 소득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지하여 주는 것은 주어진 예산으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농가소득이 낮다고 하더라도 농가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도시근로자 가구가 40% 정도가 되고, 농가 중에서도 2ha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보다 높으며, 5ha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위 10~20%에 속하고 있다. 결국 모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 소득지지 정책은 주어진 예산으로 나눠먹기식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농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때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민복지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소득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 역시 소득이 낮은 도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개방화에 의한 충격을 이겨나가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기적인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복지에 편입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나라경제』 2003년 4월호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농가소득의 문제를 가격상승과 보조로 해결하려 하였고, 이는 농업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을 상승시켜 구조조정에 역행하게 되어 농가소득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하였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생산비의 50% 정도가 정상이윤(normal profit)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낮은 것은 규모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농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농사짓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부업이 없어 생산활동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규모화로 경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면 자가노동에 대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정상이윤이 양(+)인 이상 규모를 늘리면 이윤도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로
규모화에 역행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하락
시켜 규모화를 촉진시키고, 대신에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정기간 소득을 지지하여
주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다.

규모화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가격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비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0.5ha 미만 쌀 농가의 토지용역비를 제외한 생산비가 5ha 이상 농가보다 14,400원/80kg(2002년 자료)이 더 소요되고, 이는 관세 50%p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규모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저소득 농가의 소득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규모화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에 생산활동을 한 저소득 농가에게 현재의 생산활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 지지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농가만을 대상으로 소득정책을 수립한다면 현재 규모화된 농가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최대수혜자는 현재 규모화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 규모를 확대할 농가라는 점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방화로 농가소득이 더욱 하락할 것이고, 이러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규모화이며, 개방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고 규모화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저소득 농가의 소득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쌀 가격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줄이고, 현재 생산과 연계되어 탈농의 기회비용을 상승시키는 각종 보조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쌀 가격에 대한 정부영향 축소하고,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개선해야

다른 공산품과 달리 지금까지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매제도를 통하여 가격하락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생산과잉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쌀이 관세화 유예를 받는 경우 과잉생산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이는 현재의 과잉 재배면적을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도 1인당 식용 소비량에 인구를 곱하여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하고 평년단수(5개년 동안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10a당 생산량)로 나누면 식용 소비량을 평균적으로 자급하기 위해 필요한 논 면적이 78만ha가 계산된다. 여기에 종자 및 감모를 12% 더 계산하면 87만ha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논 면적으로 계산된다.

2003년 재배면적이 101만ha라는 점에서 평균적으로 14만ha의 논이 과잉 재배면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 전체 논 면적 12만ha보다 더 많은 논 면적이 과잉 재배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한동안 급격히 줄 것이고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인하폭을 줄이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이 증대된다면 과다한 정부재고로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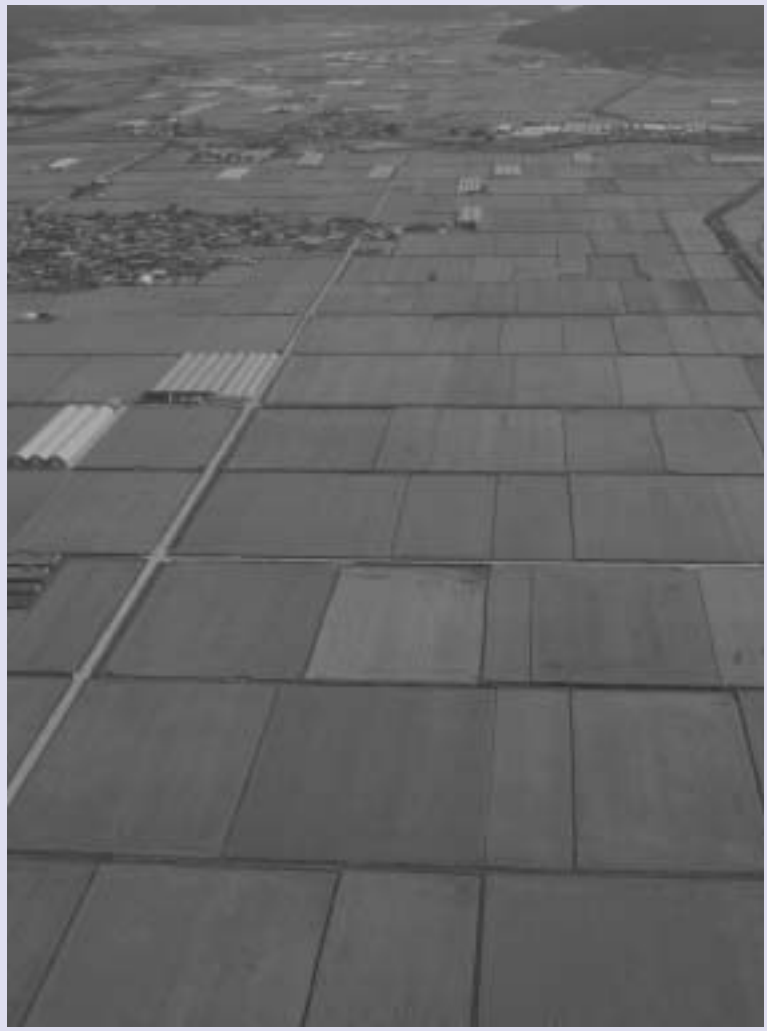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수매제도를 WTO 체제에서 허용대상으로 분류되는 공공비축제도로 전환하는 길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공비축제도로의 전환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만약 관세화 유예를 받거나 관세화가 되더라도 관세인하폭을 줄이는 대신에 의무수입물량을 더 증대시키는 경우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추가수입이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국내 가격을 과거와 같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농민들의 공공비축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고, 정부는 가능한 가격을 지지하여 주기 위해 현재와 같이 과도한 재고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규모화를 위해 필수조건인 쌀 가격 하락은 보조금 감축으로 더 이상 수매제

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떨어버릴 수 없다.

정부나 정치권은 가격 추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하고, 가격의 진폭을 줄여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범위 내에서만 가격에 간섭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특히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UR 농업협상 체결 이후 우리 농업정책은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고, 그동안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생산과 연계된 정책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대상이 모든 농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의 경우에는 논이 생산하는 환경재에 대한 보상으로 1ha에 53만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논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과잉생산으로 1ha의 논에 벼를 재배하지 않으면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로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1ha에서 생산된 쌀을 1천만원에 수매하여 이를 200만원 정도의 가치(국제시장가격)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산을 장려하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로 농민에게 53만2천원을 보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300만원을 보조하거나 수매가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치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모순된 정책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벼 재배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규모화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생산과 연계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연도(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농민들에게 생산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농업이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100만 농가 정도가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모화가 되고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농가수도 급격히 줄 것이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가 현재의 농

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앞으로 식량안보를 담당하게 될 미래 농민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생산활동을 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는 현재의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하나는 주기적으로 기준연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생산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기준연도의 변경으로 생산활동을 중지하는 시점에 따라 지급받는 기간이 다르게 되는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활동을 중단한 농가에게는 일률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규모화의 수혜자는 경쟁력을 지닌 농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2001년산 수확기 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2002년산부터 보전 기준가격보다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의 80%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속적인 대북지원과 흉년 그리고 재고관리를 통한 정부의 가격지지 노력으로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보전금이 지급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쌀 협상과 DDA 협상 결과 어느 정도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제도는 가격하락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는 감축대상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생산과 연계된 정책이기 때문에 규모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는 것이다. 쌀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보다 소득이 낮은 도시근로자들이 왜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쌀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여 규모가 클수록 적자가 커지기 때문이라면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쌀 협상과 DDA 협상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생산비보다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로 규모화에 역행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하락시켜 규모화를 촉진시키고, 대신에 저소득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정기간 소득을 지지하여 주는 정책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쟁력을 지닌 영농규모가 큰 농가는 규모화에 역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보다는 쌀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토지용역비의 하락 그리고 규모화로 인한 소득증대로 장기적으로 규모화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원자재 수급난, 해법 없나

최근 고철·시멘트 등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수출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재 수급난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원고배열은 원고 도착순에 따랐음.

수급기업간 정보 공유로 수요·가격 예측력 높여야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실장
(lbw@fki.or.kr)

최근 고철·시멘트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원유가 급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인플레 압력과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산업계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확한 수요 및 가격 예측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는 물론 원자재 장기공급계약 체결, 조달원의 다양화, 업계 공동구매 체결, 해외자원개발투자 확대는 물론 자원 및 에너지 절약방안이 종합적·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인플레·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돼

2004년 3월 현재 국제 원유가는 지난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수준인 30.72달러로 2002년 1월 18.54달러 대비 65.7%가 상승하였다. 고철의 경우는 무려 122%나 올랐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철강재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세의 지속 원인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해상운임 증가, 세계경제 회복 및 심리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수급 불균형으로 기업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거시적으로도 인플레 압력과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전가시킬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인건비 등 관리비용 절감으로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당국은 가격급등 원자재의 할당관세 인하, 정부비

〈표 1〉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률

(단위 : %)

품 목		상승률	품 목		상승률
석유	두바이유	54.6	비철금속	니켈	96.1
	서부텍사스중질유	64.8		납	51.1
석유화학	나프타	13.6		주석	40.9
철	철광석	29.3	농산물	원면	42.9
	고철	122		대두	35.8
				소맥	12.1
			기타	천연고무	46.6

주 : 2002년말 대비 2004년 2월 현재 가격상승률. 단, 유가는 2001년말 대비임.

축물자 공급확대, 원자재수급 안정대책 태스크포스팀 가동과 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 운용 등 다양한 원자재 수급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시장원리보다 행정력을 이용한 시장규제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원유 할당관세 및 휘발유 교통세의 인하 조치와 함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해외자원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03년 현재 국내 원유 도입분 중 자주개발 원유의 비중은 3%에 불과하며, 97% 이상(8억 404만배럴 : 231억달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71%, 일본 15%, 이탈리아 1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물류체계의 혁신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흐름의 원활화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국제 원자재에 대한 정확한 수요·가격 예측을 위한 정보의 수집·공유, 원자재 장기공급계약 체결, 조달원 다양화, 업계 공동구매 체결, 해외자원개발투자 확대는 물론 자원 및 에너지 절약방안이 종합적·체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수급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가동이 시급

업계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의 가동이 시급하다. 전경련이 업계 공동으로 철강(고철·선철·후판), 원유(나프타 등), 시멘트(건설용 모래 등) 등 주요 원자재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가동하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먼저, 국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및 가격 예측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다만, 시장의 글로벌화로 변동의 폭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에 세계시장의 변화를 읽고, 제품과 원자재의 수급과 가격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단기 수급전망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원자재가격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사전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수요업체와 공급업체와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국가나 공공 연구소도 이러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계에 신속한 원자재 수급전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기업간 'win-win' 차원의 장기계약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선박 건조용 후판은 가격을 불문하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H조선사의 경우 연간 550만t 정도의 후판이 필요한데, 올해중 약 40만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나마 부족량이 적은 것은 해외 원자재 공급업체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헷징해 왔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도 원자재 공급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덕택에 철강석과 석탄의 조달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장기계약 체결방식을 중소기업들도 업계 공동으

〈표 2〉 주요 원자재별 수급애로 원인 및 파급영향

	원 인	수급애로 및 파급영향
원 유	• 세계(미국 등)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재고 감소 • OPEC의 감산 발표	• 석유사업의 경영수지 악화, 에너지다소비 업종(항공·해운 등 운송업, 철강, 발전 등) 및 석유 전방산업(석유화학 등)의 원가부담 심화 • 원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철 강 (고철)	• 세계(미국 등)경제 회복 및 중국의 수요 증가 • 국내 고철상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	• 전기로 제강사·주물·단순압연 업체 조업차질 → 건설업 원자재(철근, H형강 등) 파동, 자동차·조선·기계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생산 차질
시멘트	• 중국의 수요 증가 (2003년 세계 시멘트의 50% 소비)	• 건설업 원자재 수급애로

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 조달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공급사슬상에 있는 모든 주체간에 'win-win' 할 수 있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사슬관리) 구축 또한 필요하다. 고객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각 주체가 원자재와 재고부담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며,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완충시스템(buffering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일부 업계 및 시민단체가 원자재가격 및 제품가격의 인하 압력수단으로 요구해 온 원가공개 요구는 문제해결보다는 기업의 경영혁신 의욕과 창의성을 저상하는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기업의 제조원가 공개는 경쟁게임에서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고 게임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이는 게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원가관리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서 경영전략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원가를 공개할 경우 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유인이 상실된다. 건설업 등 대다수 산업은 경기사이클에 민감한 업종으로서 수익성의 기복이 심하므로 10년 정도의 장기간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평가해야 한다. 예컨대, 건설업체의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면, 2001~2002년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1997~2000년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한 주체인 소비자의 원가공개 요구는 기업의 핵심주체인 주주의 이익 보호에 반하게 되므로,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경영진은 소비자의 정보공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각계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기 이익을 추구할 때보다 상호 협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원자재 계약단계에서부터 수급난 해소와 가격 변동을 헷징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용어해설

매출채권팩토링제도

매출채권팩토링제도(account receivable factoring system)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팩토링금융은 기업들이 상거래 대가로 현금 대신 받은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하여 기업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급되어 왔다. 신용상태가 좋은 물품구입자 대신에 물품대금을 매출자에게 지급해 주는 업무 외에도 선대를 하고 업체의 신용조사·보증업무도 한다. 대출한도는 매입채권액면의 100%까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의 매출규모나 신용도에 따라 다소 낮아지기도 한다.

팩토링의 거래당사자에는 Factor(팩토링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금융기관), Client(factor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처로서 이 계약에 의해 해당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Factor에게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음) 및 Customer(client의 판매처로서 factor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에 해당)가 있다.

무역금융 지원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정신 긴요



김재숙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팀 실장
(mriss@kotis.net)

올해 들어 본격화된 원자재가격 폭등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몫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유례 없는 상황을 맞아 기업들은 대비책을 짜느라 분주하고 정부 또한 여러 가지 장단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세는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급도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 들어서도 내수회복 시기가 지연되는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계속된다면 불황의 골도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해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최대 성장동력으로,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내다 파는 수출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 전세계 원자재 싹쓸이

원자재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흔히 세계경제 회복, 중국수요 급증, 달러화 약세 등이 꼽힌다. 이 중 세계경제의 '블랙홀'인 중국의 수입확대는 무서운 정도를 넘어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건설·자동차경기 호조로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철광석의 경우 지난해 세계 물동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4,600만t을 수입했다. 중국은 올해도 최소 7%대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 서부 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원자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다 최근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인도·러시아 등 거대 신흥국 역시 고성장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사정을 반영해 최근의 국제 원자재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자재인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중질유(WTI)를 기준으로 배럴당 37달러를 상향 돌파하며 최근 1년새 최고치를 갱신했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13개월 만에 배럴당 31달러를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연도 올해 들어서만 33% 이상 값이 오르면서 3년 만에 최고치인 t당 1,13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주석 가격은 t당 6,900달러를 기록, 8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주요 원자재가격의 급등세는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 시장인 런던금속거래소(LME)의 2월중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이 전년 대비 11% 늘어난 데서도 나타난다. 거래량 급증을 바탕으로 3월 들어 구리·알루미늄·주석·납·아연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이 장기 고점을 돌파하는 등 가파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LME는 126년 역사상 최대 활황을 맞고 있다.

곡물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매매된 대두·옥수수·밀 등 주요 곡물의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2% 급증했다. 이에 따라 대두 가격은 3월 둘째주 들어 지난 1988년 이래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커피·코코아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곡물들 역시 지난 두 달간 15%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대두는 브라질의 작황이 악화되고 미국내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 고점 돌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 급등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필요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해야 하는 국내 사정상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어쩔 수 없다.

지자체들은 고철가격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자 수거 목표를 정하고 지원예산을 배정하는가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고철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이고 있다. 조선용 후판을 생산하는 동국제강은 최근 최고경영자까지 나서 국내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체의 제품수출을 중단하고 내수공급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자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웃돈을 주고도 물건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기는가 하면 수급과정에서의 이견이 물리력 행사로 드러나는 등 마찰음도 들리고 있다. 지방 골판지 3사가 부도를 낸 데 이어 최근 부산지역 주물업체들이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를 놓고 완성차 업체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단기간이지만 납품을 중단한 것이 그것이다.

무역금융 지원, 할당관세 품목 확대, 자원외교 강화 등 다각적 접근 필요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무역금융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초래된 무역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 구매용 무역금융 긴급자금을 새로 조성해 저리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뜻밖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철강 등 최근 급등한 수출용 원자재 구매업체의 자금수요 현황을 파악, 통상적인 무역금융 한도 이외에 별도의 무역금융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시시기나 대상품목수, 인하수준 면에서 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관세수입에만 연연하지 말고 품목수와 인하폭을 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차제에 중간재 및 완제품보다 관세가 높거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관세를 무세화(無稅化)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 움직임은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과 자금 회수기간의 지연, 자원보유국들의 과도한 요구, 개발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생각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민간 주도형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기존 수입국인 호주·캐나다는 물론, 칠레 등 중남미 국가, 자원부국으로 부상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원외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원자재난 장기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 산업자원부 내 1개 부서가 과거 동력자원부 기능을 맡고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전담기구로서 제구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원자재 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파동을 사전에 막거나 충격을 완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종합상사 등 대기업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공동 구매함으로써 가격 인상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에 원자재 인상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형편을 감안, 가격 현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무역금융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며,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업 해외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재난 장기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며,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도 활용해야 한다.

최근 무역협회가 4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급등과 환율 불안으로 응답자의 64.3%가 향후 수출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채산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무려 78.8%가 종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향후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그 이유 역시 대부분 원자재 구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의 절대 부분을 수출에 의존했던 점을 상기할 때 원자재가격이 하루빨리 안정되고 수급걱정이 없어져 이 같은 수출업계의 전망이 빗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중국發 원자재난에 종합·장기적 대응을



엄성필
KOTRA 해외조사팀장
(darkdesert@kotra.or.kr)

세계경제의 핫이슈로 부상한 원자재 수급문제의 원인으로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 공업국가의 원자재 수요 증가, 달러 약세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주요 원자재 생산국가 및 기업이 생산량 증대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등이 꼽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자재 블랙홀'로 등장한 중국이 최근 원자재 수급난의 직접적인 진원지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원자재난은 중국경제의 중공업화에 따른 필연적 결과

중국의 원자재난은 브레이크 없는 고도성장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중국은 이라크전·사스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9.1%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6.7%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정자산투자 대부분은 제조업 생산라인 확충 또는 SOC 분야에 집중되어, 원자재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특히 총통화 증가율(M2)이 19.6%에 달하여,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의 연초 목표치 16%를 크게 넘어 섰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자금 중 상당부분이 산업현장의 설비 증설 등에 집중 투자되었는데, 특히 주요 업체간 경쟁적 투자가 이루어진 철강·시멘트 등의 업종에서 원자재 싹쓸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중국학자들은 최근 원자재난 및 에너지난을 중국경제의 중공업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실제 1998년 55.2 : 44.8의 비율이었던 중공업 대 경공업 비율은 2001년 중공업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서,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64.3 : 35.7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급속한 중공업화는 필연적으로 석유·석탄 등 에너지원, 철강·비철금속·고무 등 각종 원자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현재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중국의 낙후된 교통체계도 원자재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최대의 에너지원인 석탄의 경우 중국내 철로를 통한 운송능력은 실제 수요의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각종 원자재의 수입 증가에 따라 지난해 중국내 항구의 화물 취급량이 18%나 증가하여, 낙후된 중국의 항만 하역능력을 초과, 주요 원자재 하역항구에서 체선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發 국제 원자재 파동은 단기간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상당기간 동안 중국이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속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오는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 서부 대개발 및 동북지방 재개조 사업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줄줄이 추진되고 있어,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원자재 파동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도 원자재 대란의 고통을 겪고 있다. 중국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의 중국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웃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해 12월말 중국의 철강 가격지수는 연초에 비해 7.6%, 천연고무는 40%, 석유는 19% 증가했다. 올해 연초에도 가격상승이 계속되어 3월 현재 철강은 t당 수백위엔씩 상승, 12월말과 비교시 무려 14%나 올라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천연고무도 12월말 t당 1만1천위엔이었던 가격이 1만5천위엔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약 100%가 증가한 것이다. 석유가격도 역시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올랐다.

> 중국경제의 급격한 중공업화, 낙후된 교통체계 등으로 중국發 국제원자재 파동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고속성장 지속 속에 2008년 북경 올림픽 등 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추진돼 원자재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주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 분위기에 편승, 중간 유통상들도 지난해 연말부터 매점매석에 나서 확보한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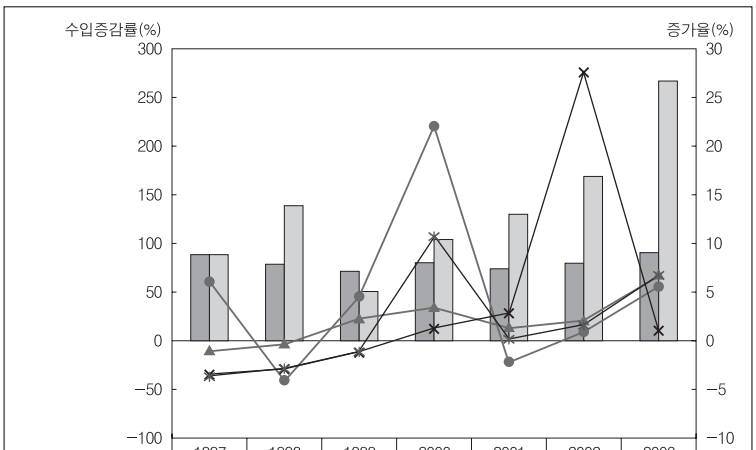
원자재난 중국경제에 주름살 안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원자재가격 폭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계상황에 닥쳐 조업중단 또는 아예 공장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중국내 강재가격이 최근 두달새 30% 이상 치솟으면서 오토바이 업체를 시작으로 산업계 감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명 오토바이 메이커인 충칭리판(重慶力帆) 그룹 인밍샨(尹明善) 회장은 "이번 강재 파동으로 부품업체, 완성차 할 것 없이 수개월째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손실을 줄이려면 모두 감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리판 그룹에 따르면, 자사는 물론 룽싱(隆興)·쟈링(嘉陵) 등 다른 오토바이 업체들이 이미 감산에 들어가, 중국내 오토바이 업체들의 감산 비율은 2월말 현재 10% 수준에 달했으며, 그 비율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중국경제 현황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8.8	7.8	7.1	8.0	7.3	8.0	9.1
고정자산투자	8.8	13.9	5.1	10.3	13.0	16.9	26.7
석유	60.2	−41.4	45.1	219.6	−21.3	9.3	55.3
철강	−10.7	−3.8	22.7	33.6	14.4	20.9	67.9
석탄	−34.5	−28.4	−11.1	12.7	27.6	275.4	10.9
천연고무	−37.8	−28.8	−11.8	106.9	1.4	17.2	66.4

주 : GDP·고정자산투자는 증가율, 철강·석탄·천연고무·석유는 수입증감률임.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국가통계국, WTA(1996~2003년)


▲중국 충칭의 창안 자동차 조립공장

한편 중국 물가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난으로 인플레 심리가 확산되면서 농산물에 이어 공산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요 가전업체의 하나인 'TCL'은 원가상승 부담으로 올해에 출시할 에어컨 신제품 가격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중국내 에어컨 생산업체 중 하나인 동양공조(東洋空調)는 석유·강재·플라스틱·운송 등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이미 일부 제품의 원가가 제품가격을 넘어서고 있어 부분적으로 제품가격을 최고 30%까지 올릴 예정이다. 이러한 가전업체의 가격상승 신호가 이미 가전시장에 전달되고 있으며, 가전시장을 주도하는 궈메이(國美)·쑤닝(蘇寧) 등 주요 가전유통업체의 판매제품에서도 가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내 공산품 가격이 그동안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지속 하락되는 추세를 보여온 점에서 보면 최근의 가격인상 추세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중국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지난해 1.2%보다 1.8% 높은 3%선에서 억제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거시통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어 온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면에서도 빨간 불이 켜졌다.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28.7% 증가한 698억7천만달러인 데 반해, 수입은 무려 42% 늘어난 777억2천만달러를 기록, 79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최초로 12억4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사상 최대규모이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원자재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동 기간 중 원유·철광석 등 원자재의 수입액이 168억2천만달러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64.9%의 폭등세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거침 없는 질주를 해오던 중국경제가 원자재난이라는 최대의 복병에 맞닥뜨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중국업체뿐만 아니라 현지에 투자진출한 우리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모국 의존도가 높은 투자기업들은 국내 원자재난에 따른 조달차질과 최근 해상운임 폭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중국내 원자재 대란이 겹쳐짐에 따라 중국내에서의 원자재 공급선 다변화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주요 원자재에 대해 구매력이 큰 대형 중국 로컬업체들의 사재기가 극성을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은 웃돈을 주고도 필요 원자재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한다 하더라도 높은 가격 때문에 생산을 계속해도 경상비용조차 건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정부, '고도성장'에서 '균형성장'으로 속도조절 나서

최근의 원자재 및 에너지난이 초고속 성장의 부작용인 과잉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중국정부는 경제성장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5일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석상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보다 2.1%p나 낮은 수준이다. 고속성장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정부는 과열업종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 에너지 및 자원 다소비 프로젝트의 중단과 대출제한, 조세우세정책 남발 금지 등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 최근 원자재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기 과열업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 철강협회는 올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중앙정부에 의해 15%선까지 하락될 경우, 중국의 철강수요 증가율도 지난해 25.6%에서 올해 13%까지 둔화되어 원자재 수급난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정부의 투자억제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홍콩 中銀국제연구소는 개별업종별로 투자과열을 억제하는 것은 중앙의 행정정책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각 업종별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부문의 경우, 이미 기업들의 내부 자금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은행대출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대출 등을 통한 통제가 어려우며, 일부 자동차 조립생산 업종의 경우 외자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행정 영향력이 비교적 약하다고 분석하였다.

거시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원자재난 해결을 위한 각종 미시적인 대책도 내놓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원자재 수급대책을 마련, 원자재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석탄 등 자국의 주요 원자재 수출을 줄이거나 사실상 중단하고 부문별 원자재 수급을 조절하는 한편, 원자재 수출기업과의 합병이나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해 나가는 등 긴급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 중국내 원자재 수요가 당분간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원자재 비축·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내 원자재 수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자원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의 호주 광산업체인 BHP빌리턴과 90억달러 규모의 광산개발에 나섰고 원유 장기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인도와는 원자재 바터 교환제가 추진중이다. 인도산 철강석 확보를 위해 타국에 대해서는 석탄 수출을 제한하면서, 인도와는 바터 교환제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원자재 비축 및 수급 정책 수립 필요

중국내 원자재 수요가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세계경기 회복 추세가 완연하기 때문에, 국제적 원자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원자재 비축 및 수급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내 원자재 수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자재 사재기에 의한 피해, 무리한 가격 인상 및 담합, 일방적인 공급물량 축소 및 중단 등에 따른 제조업체 생산차질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철강업계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안정적인 자원확보 루트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일본제철이 중국 텐진(天津)시에 코크스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 전세계적으로 수급난을 겪고 있는 코크스를 연간 30만t이나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은 우리 정부나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정적 원자재 수급에 만전



김성환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장

2003년 하반기 이후 급상승한 국제 원자재가격은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철근·고철·비철금속·화섬원료 등 주요 공산품 원자재는 급등세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미국·EU 등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국제 원자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고도성장과정에서 철강·건설·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확대함으로써 원자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최근의 달러화 약세와 국제적 저금리 기조로 국제투기자본이 비철금속 등 원자재시장으로 유입되어 단기적 가격상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또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가격은 올해초까지 형성된 높은 가격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향후 3개월 동안의 국내외 시장동향이 하반기 원자재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인 원자재가격은 선진국 경기회복의 정도, 달러화 약세 지속 여부, 중국의 원자재난 대응강도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원자재가격 동향

(단위 : $/ton)

	2003. 12(A)	2004. 1월말	2004. 2월말(B)	증가율(B/A)
원유(두바이油, $/b)	28.10	28.88	28.59	1.7%
철강				
철근	295	380	490	66.1%
고철	217	288	340	56.7%
비철금속				
구리	2,321	2,489	2,987	28.7%
납	733	787	945	28.9%
화섬원료				
테레프탈산(TPA)	575	600	680	18.3%
에틸렌글리콜(EG)	690	773	841	21.9%

지난 2월 17일, '제1차 원자재 수급대책' 수립·추진

원자재 수급은 기본적인 경제흐름의 한 형태인 만큼 국내외 시장기능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다. 다만, 단기간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국내경제에 예측하지 못한 과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응책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03년 하반기 들어 원유·철강·비철금속 등 주요 기초 원자재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감지하고 이들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주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말에 후판·철근·고철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물

량수급에도 이상징후를 보임에 따라 즉각 유통실태점검 등 초기대응에 착수했다.

2004년 들어 정부는 주요 원자재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차 원자재 수급대책'(2004. 2. 17)을 수립하고 주요 원자재의 가격관리 및 공급확대 대책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이 급등하고 중소기업이 물량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전기동·니켈괴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인하하였고 정부비축물자 공급을 확대하였다. 특히 원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원 등 2,950억원의 원자재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국내 시장기능에 의해 원자재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적절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지난 2월에 '제1차 원자재 수급대책'을 수립, 가격관리 및 공급확대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재 품목별 수급회의(14회), 현장방문(3회),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등을 통해 원자재 수급상황을 종합 점검한 결과, 원유·비철금속·화섬원료 등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수급에 문제는 없으나, 철강재 중 고철·철근 2개 품목은 가격급등과 함께 상당한 수급애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 '고철·철근에 대한 집중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수출제한제도를 통해 수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행위 단속지침을 마련하여 산업자원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철강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철근의 경우 수출계획물량 중 6만7천t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하는 등 국내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3월부터 건설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여 철근 공급부족분을 긴급 수입하여 추가적인 수급불안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일부 품목의 비축규모를 확대하며 가격급등세가 지속되는 품목은 추가적으로 할당관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원자재 구입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5천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실시(3. 10)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도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1,2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2〉 정부의 주요 대응기능

모니터링	원자재 주무부처 중심으로 가격 모니터링 실시
가격관리	할당관세제도를 통해 가격 인상요인 일부 흡수
수요관리	해외수요에 대한 수출제한 및 통제조치
공급관리	비경쟁 원자재 중심으로 비축물자제도 운영
기타 정책적 대응	•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및 경영안정 지원 •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 관련업계와의 협조를 통한 수급안정화 유도 등

철강 수급 3단계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정부와 업계의 이러한 노력으로 후판·철근 등 문제품목의 수급불안이 다소간 완화되고 있고, 3월초부터는 고철 등 일부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조정국면을 보이는 등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에도 불구하고, 가격급등세가 예상보다 빨라 적기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바, 따라서 보다 조기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처가 가능한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철강재를 대상으로 국내외 시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3단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Yellow)로, 현재와 같이 국내외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상 애로가 발생하면 원자재 수급 모니터링 실시, 가격이 급상승한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 확대, 매점매석 등 유통단계에 대한 점검 및 단속, 업계의 가격안정화 및 생산증대 유도, 정부의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시장기능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차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2단계(Orange) 조치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발동하여 정부의 수입비축 및 방출 확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물량 제한, 주요 원자재가격 제한 등 가격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격체계가 붕괴되고 세계적인 수급파동이 발생하는 등 극단의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3단계(Red) 대응조치로서 생산계획의 수립 및 변경, 원자재의 공급·출고 및 수출입 조절, 운송·보관 조절, 유통조직 정비 및 단계 단순화 등 강력한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철강재에 대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대응단계를 판단하고 적기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발동하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에 따라 담당부처별로 가격·수요·공급관리 등을 분담하여 대응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향후 수급차질의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추가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통해 주요 원자재의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유연탄·우라늄·철광석·동·아연·희토류 등 6대 원자재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해외광산조사 및 개발에 대해 13억달러를 신규 투자하는 등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원자재 안보의 차원에서 중동지역 일변도의 자원확보 채널을 다변화하여 앞으로는 카자흐스탄(카스피해의 석유·동·아연), 인도네시아(유연탄), 칠레·페루(동) 등 비중동권으로 자원공급선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자원외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표 3〉 철강의 3단계 대응시스템

	국내외 철강시황	대 응 계 획
1단계 (Yellow)	• 가격 상승 • 수급애로 발생	시장기능 보완 • 원자재 수급 모니터링(산업자원부 T/F, 시행중) • 주요 원자재 할당관세 확대(시행중) • 매점매석 등 유통단계 점검·단속(시행중) • 업계의 가격안정화 및 생산증대 유도(시행중) •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시행중)
2단계 (Orange)	• 가격 급등 • 수급차질 지속	가격안정화 주력 • 범정부적인 대책기구 발동 • 조달청 수입비축 및 방출 확대 • 주요 원자재 수출물량 제한 • 주요 원자재가격 제한 (부품·소재법 개정시 반영)
3단계 (Red)	• 가격체계 붕괴 • 세계적 수급파동 발생	수급안정화 주력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긴급 수급조정조치 발동 • 생산계획 수립실시 및 변경 • 공급, 출고 및 수출입 조절 • 운송, 보관 또는 양도조절 • 유통조직 정비 및 단계 단순화

필요시 시장기능 보완대책 추진

최근의 원자재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 원자재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의해 촉발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가격상승에 불안을 느낀 관련업계에서 평소보다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공급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원활한 유통을 방해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더욱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기능에 의해 원자재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시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실시하는 것이 물론 긴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원자재 수출입업체, 국내 생산업체, 유통업체, 최종수요자 등 관련당사자가 제각기 자신의 단기적 이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협조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전개되었던 '금 모으기 운동'이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고철수집운동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원자재 수급애로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정책해설



58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원칙과 인내 필요**/ 추경호

61 >>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 나승렬

65 >> **전자태그산업 육성 :** u-센서 네트워크 기본계획 / 조규조

68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 강형신

71 >> **마일리지제도의 공정 운영 강화** / 송상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원칙과 인내 필요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신용불량자'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이나 TV 등 방송매체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신용불량자 문제가 우리 경제·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신용회복 지원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필연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불량자에만 한정해서 해법을 찾을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성실한 채무자들과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채무자들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정부,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

신용불량자 대책이 채무상환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채무상환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시장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기책임원칙이 무너지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통해 근원적인 해결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도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금융기관과 관련협회·관계전문가 등과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지난 3월 10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신용불량자 대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직접 실태조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들의 행태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두고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다만, 대책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비판은 대책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오히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대책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라경제』 지면을 빌어 독자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히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신용불량자가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신용회복 지원 노력 강화, 도덕적 해이 차단방안도 마련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실태분석 결과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신용불량자들의 부채는 등록당시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득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들의 소득기반이 취약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불량자들의 대부분이 일시에 빚을 상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카드사 가계신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신용불량자를 대량적으로 발생하게 한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중 상당수(63%)가 채무 재조정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 접촉거부, 채무 감면에 대한 기대로 상환을 기피하는 사례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신용불량자가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신용불량자들의 취약한 소득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이다. 소득 증대로 채무상환 능력이 높아지면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불량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추진중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신용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러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도 신용불량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그간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이 연착륙되도록 하는 한편, 한계채무자에게 신용불량자가 되기 이전에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의 추가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한 개 기관에만 등록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만기 연장, 분할 상환 등 채무 재조정과 함께 거래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알선을 통해 채무상환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다중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한 후 채무 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함으로써 신용회복 지원의 실효성도 높이고, 채무자의 추심 부담도 완화해 나가게 될 것이다. 다중신용불량자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자율로 'Bad Bank' 5월중 설립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중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을 전문 취급하는 'Bad Bank'를 5월중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Bad Bank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Bad Bank에의 참여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금융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Bad Bank 대상자는 올 3월 1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중인 다중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최장 8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을 지원하게 된다. 3월 10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되지 않는 채무자의 경우(예 : 6개월 미만 연체자)에는 지금부터 연체하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다. Bad Bank 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부러 연체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아울러 원금의 3%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주는 점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지난 3월 10일 발표한 대책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므로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 일부에서는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채무상환을 지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채무상환을 지연할수록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한 차단 장치를 금융권에서 마련중에 있다. 원금 3% 선납 후 나머지 97%의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하여야 하는데 중도에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된 연체이자를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연체시점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추심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관련 기록을 각 금융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 상세히 제공하여 해당 채무자와의 금융거래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계속하여 연체할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따라서 Bad Bank를 제대로 이용하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지만, 빚을 제대로 갚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신용상실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기관 차원의 지원이 곤란하거나 채무상환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제도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을 제고

신용정보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차별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이다. 채무를 상환할지 여부는 채무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적으로 상환한 기록, 채무 재조정을 받아 상환한 기록,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는 기록 등 개인별로 어떻게 채무를 상환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각 금융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개인별 신용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우량한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금융거래시 우량 고객으로 대우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금리나 대출한도 등에서 불리하게 차별화될 것이다. 선진 사회로 갈수록 개인의 신용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지게 된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신용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기본이며, 신용이 낮으면 경제활동도 어렵다.

지난 3월 10일 발표한 대책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망라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추가적인 대책은 없다. 일부에서는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채무상환을 지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채무상환을 지연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신용불량자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금융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만큼 채무자들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 관련 자료 ▶

-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3.10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 참조)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나승렬
농림부 농업정책과장

정부는 지난 2월에 DDA농업협상, 쌀 협상 등 국제 농업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10년간의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향후 10년의 새로운 정책비전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

2001년부터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해온 작업을 바탕으로 2003년 5월 농정기획단, 8월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하였고, 농림부가 작성한 투융자 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발표하였다. 또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 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지역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일선 농업인, 공무원, 지역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비전은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이다. 농업은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은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농정은 농업체질 강화 정책 외에 농가소득정책과 농촌정책을 포괄한 종합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농정의 패러다임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농정으로, 양적 생산 중심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생각하는 품질 위주의 농정으로, 생산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정주와 휴양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다.

새로운 비전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의 중추세력 육성으로 체질 강화

농업의 체질 강화를 위해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쌀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생명산업으로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경쟁할 수 있도록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2010년까지 육성하여 전체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영농규모화사업 규모를 두 배 늘리고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은행제도도 도입한다.

원예산업은 규모화에 한계가 있어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생산자를 전국단위로 조직화하여 소비촉진과 수급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규모화가 이미 진전된 축산업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과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면서 규모화

정부는 DDA 농업협상, 쌀 협상 등 국제 농업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제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 투융자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를 더욱 가속화하여 2013년까지 전업농 2만호가 축산의 85% 이상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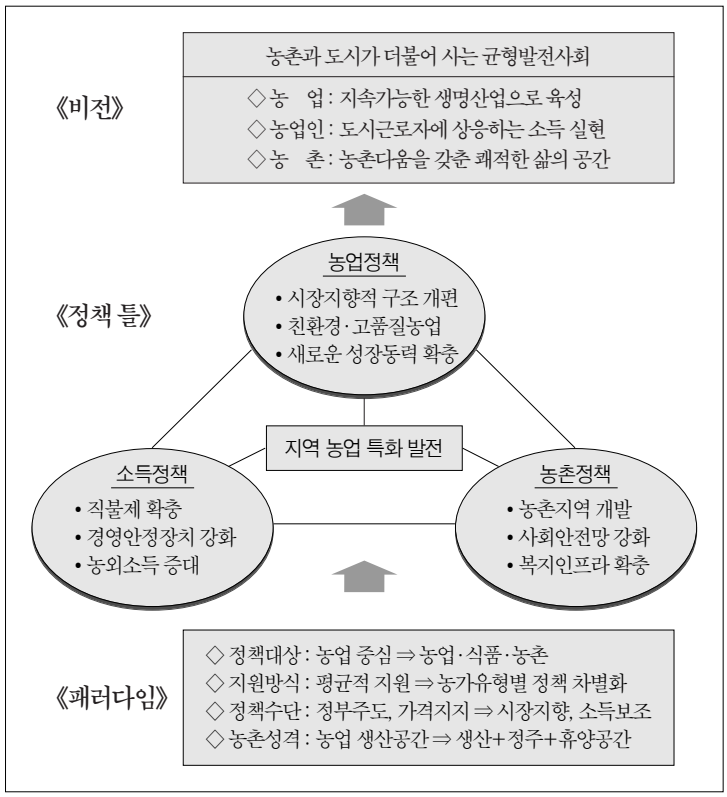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35세 미만의 젊고 의욕 있는 창업농을 매년 1천명(10년간 1만호) 선정하여 최고 2억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농업후견인제도를 통해 창업농의 영농정착을 뒷받침하며,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창업농 양성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직접지불제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충할 것이다.

논농업직불제를 생산중립직불제로 개편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전업농의 소득안정장치로 개편하는 등 기존의 직불제를 내실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직불제 예산 비중은 2013년까지 23%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품목을 사과·배 등 6개 과수품목에서 시설채소 등 30여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및 농가보험료 부담완화를 통해 재해보험을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회생을 위하여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도 지원한다.

〈그림〉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기본틀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으로 소비자 만족 실현

농식품의 안전성이 경쟁력의 출발점이므로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소비자의 식탁에 안전한 농식품을 올려 놓기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도입하여 생산·출하·가공과정에서 농약과 같은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과정에 확대하고, 가축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방역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약 사용 등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생산이력제를 채소·과일·쇠고기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할 것이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농업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국토환경 보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우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 감축할 방침이다. 2005년까지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유기질비료 공급을 확대하고 천적·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법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여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가고, 친환경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리농법'을 이용한 유기농 쌀 생산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다.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로 의료·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품질고급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세척·선별·포장이 가능한 고품질 유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IT기술을 활용해서 시장동향과 소비자 기호에 대한 품목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 수출전문단지와 물류센터를 농산물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전통음식문화의 세계화 등을 통해 2013년까지 농식품 수출 50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 복지를 확충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다.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현재 연간 8만6천원에서 최고 세 배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지원하고, 건강보험료도 현재 22% 경감에서 50%까지 지원폭을 늘려 나갈 것이다.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영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농촌출신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고충 상담 및 영유아 보육 등 종합적인 복지시설 역할을 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2008년까지 시·군당 한 개소 이상 설치하고, 농가도우미제도를 활성화해서 질병·사고에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농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농촌이 정주공간이 될 수 있도록 총 194개 읍을 농촌의 생활중심지로 개발하고, 중심지에서 떨어진 주변마을 3~5개를 묶어 1천개 권역을 종합개발할 것이다. 농촌관광마을 1천개소를 조성하고 '1社1村' 운동과 청소년 체험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농촌관광 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해 나가고자 한다. 사람과 자본이 농촌에 모일 수 있도록 농촌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에 이어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목표로 하여 농업의 중추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체질 강화,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을 통한 소비자 만족 실현, 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협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혁신으로 신뢰받는 농정 정착에 주력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향후 10년간 119조원 투융자 계획을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기 위해 사업타당성을 엄격히 평가한 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채유발을 최소화하는 등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변화하는 농촌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3년마다 평가·조정하여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갈 것이다. 투융자 우선순위도 상당수준 이루어진 생산기반정비 투자는 축소하되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는 30%까지 늘리고,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도 17%로 확대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을 살리는 농정을 추진하도록 앞으로의 농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다.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한 지역농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현장컨설팅, 신기술 산업화 창업 지원, 특화연구개발, 기술인력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를 '새로운 농정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확인·참여농정으로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업과 농촌의 틀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성공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얻어진다. 농업인·지방자치단체·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농업,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굳게 확신한다.

〈표 1〉 총 국고 투융자 규모

(단위 : 십억원, %)

	2004~2008년	2009~2013년	합 계
보 조	37,112(73.5)	52,126(75.8)	89,237
융 자	13,402(26.5)	16,651(24.2)	30,053
합 계	50,514(100.0)	68,777(100.0)	119,290

주 : 괄호 안은 비율임.

〈표 2〉 분야별 국고 투융자 규모

(단위 : 십억원, %)

	2003년	2008년	2013년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23(24.8)	3,114(28.5)	4,792(32.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4(20.7)	2,852(26.2)	4,467(30.0)
직접지불사업	722(9.4)	2,472(22.6)	3,411(22.9)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4(8.6)	1,573(14.4)	2,556(17.2)
농산물 유통혁신	518(6.7)	1,018(9.3)	952(6.4)
산림자원 육성	503(6.5)	658(6.0)	809(5.4)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4(32.6)	1,705(15.7)	1,316(8.8)
합 계	7,705(100.0)	10,920(100.0)	14,891(100.0)

주 : 괄호 안은 비율임.

◀ 관련 자료 ▶

- 농림부 기획관리실, 「새로운 10년을 여는 농업·농촌대책」, 2004. 2. 23 (KDI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조)

전자태그산업 육성
u-센서 네트워크 기본계획



조규조
정보통신부 주파수과장

인터넷과 이동전화 없는 생활은 하루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정보화는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속도와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는 단지 시작단계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대부분 사람을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사람에 의한 정보화이고 또한 상품으로 보면 소품종 소량생산체제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보화는 사물중심으로 그리고 다품종 다량생산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즉 정보화를 나무로 비유하면 이전에는 굵은 줄기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무수한 가지가 뻗어 나오는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태그(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다.

전자태그, IT시장 선도할 유망기술로 부상

전자태그는 물품 등 관리할 사물에 아주 작은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사물의 정보(Identification) 및 주변 환경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전자태그의 서비스 개념



전자태그는 전파와 전자칩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코드처럼 스캐너를 제품 하나하나에 바로 갖다 댈 필요 없이 수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도 많은 제품의 정보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

전자태그의 발전 단

정부는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를 u-센서 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고, 기술 개발·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u-센서 네트워크는 생활의 모든 분야에 정보화를 확산시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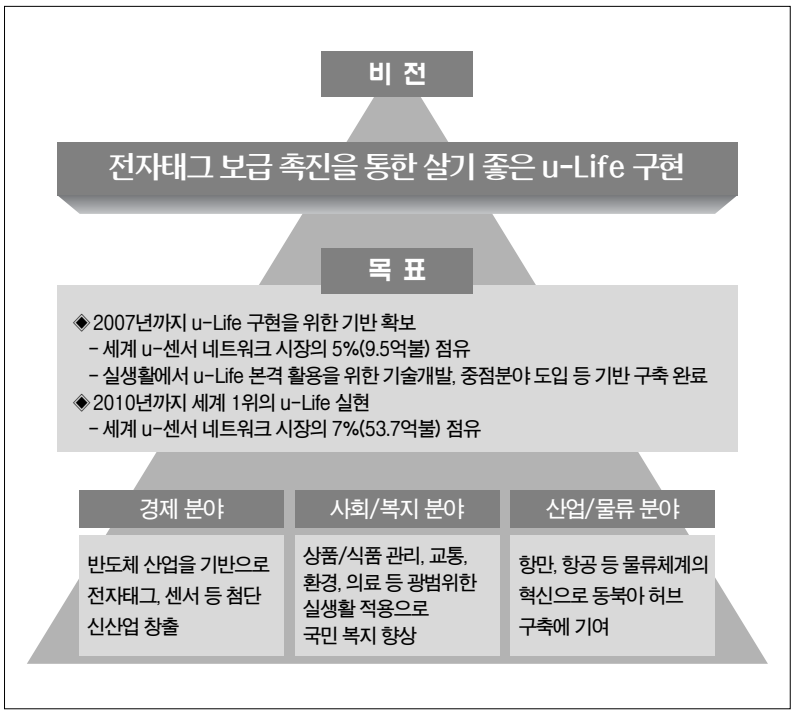
계는 사물의 고유한 코드를 인식하는 읽는 기능 중심에서 사물의 이력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읽고/쓰기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도·습도·압력 등 주변의 정보까지 감지하는 센싱기능, 이들간에 안전하고 생존성이 큰 통신망을 구성하도록 하는 통신기술, 궁극적으로는 전자태그간에 상태를 감지하여 바로 적합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기능이 부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바로 사물에 통신과 컴퓨터 기능을 갖는 전자칩을 내장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자태그를 앞으로 IT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술 중 하나로 보고 수년 전부터 이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에 비해 기술력 등이 뒤지기는 했으나 반도체·이동통신 등 관련 기술 수준이 높아 선진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또한,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과 국가적인 추진체계를 활용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제 유비쿼터스는 더 이상 개념적인 단계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u-센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향후 u-센서 네트워크 기술 발전은 칩의 가격·크기·성능 등 전자태그(센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에서의 적용이 확산되면서 단계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전자태그가 소형화·지능화되는 데 비하여 가격은 수 센트로 저가화가 실현되면서, 물류, 유통분야 및 환경, 재해예방, 의료관리, 식품관리 등 실생활에서의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읽기 전용 칩 가격은 5~20센트로 태그 가격은 약 10~50센트이나, 태그 가격은 수년 이내 5센트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며, 1센트 이하로 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chipless 기술사용이 불가피하며, 2007년부터는 chipless 태그의 시장점유율이 10%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태그의 기술은 현재의 고정된 개체인식코드 획득 수준에서 2007년경 다기능 태그에 의한 상황인지처리 수준으로 진화하여, 2010년 이후에는 개체간 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형 u-센서 네트워

〈그림 2〉 전자태그산업 정책 비전 및 목표



크로 발전될 전망이다.

u-센서 네트워크 세계시장은 2003년 16억1천만달러 규모에서 전자태그 부문에 연평균 30.8%, 센싱 부문에 연평균 81.3% 등의 성장을 통해 2005년 72억달러, 2007년 191억달러, 2010년에 768억1천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국내시장은 2005년 4,493억원, 2007년 1조 1,947억원, 2010년에 4조7,928억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태그산업 육성 위한 u-센서 네트워크 기본계획 마련

정부는 전자태그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를 u-센서 네트워크(USN : Ubiquitous-Sensor Network)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였으며,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자태그를 일부 제한적인 용도로부터 모든 사물에 확대 적용시키고 기존의 단순한 인식기능뿐만 아니라 센싱 및 네트워크 기능 등도 갖추어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u-센서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라는 기본바탕에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 즉, 식료품으로부터 축산물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관리, 물류·유통, 보안 등의 영역까지 정보화를 침투·확산시켜 비즈니스에 대변혁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렇게 u-센서 네트워크가 우리의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지금부터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정보보호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관련법 제도 제정을 통해 역기능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u-센서 네트워크는 정부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IT 신성장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기반기술로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 범위가 넓어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자태그 보급 촉진을 통한 살기 좋은 u-Life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이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초고속 유 ·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2010년까지 세계 u-센서 네트워크 시장의 7% 규모인 54억 달러 생산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38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2010년까지 7년간 총 1,626억원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 자료 ▶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정통부, 사물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신 정보화시대 선도」, 2004. 2. 17 (KDI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강형신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집필 당시는 환경평가과장)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결정·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8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2,300여건이 넘는 개발사업의 평가협의를 거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 이상 환경을 무시하고 추진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도록 함과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을 경계하도록 하는 등 가장 영향력 있는 제도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보상 등 이해관계 해결수단의 한 방편으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단체들은 현행 제도가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개발의 면죄부라는 인식하에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도 판단하는 최고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절차가 까다롭고 자의적 규제로 사업지연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포럼을 운영하여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에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다.

평가항목·범위 획정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이번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항목·범위 획정제도를 의욕적으로 새로 도입하는 한편, 평가서 작성대행 계약시 공사계약과 분리발주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서류의 공개 확대,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합리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도에 개정된 법령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다. 그리고 법률 개정사항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타 사항은 각각의 개정일부터 시행된다.

첫째, 평가항목·범위 획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간 환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지역주민·환경단체·사업자 간 상반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지난해 12월에 개정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함에 있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분야 등 3개 분야 23개 평가항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평가서가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는 등 평가서 작성의 비효율성과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종전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승인기관·관계전문가·사업자·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 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범위를 협의·결정하도록 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점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항목·범위는 법적 확정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모든 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을 대폭 감소·개선함은 물론, 평가 전 항목·범위설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킴으로써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평가서 대행계약시 분리발주제를 도입하였다.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을 대행업체에 발주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하여 맡김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사계절조사 등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가 부실해지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행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가 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분리계약 미이행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1천만원 이하 과태료)함으로써 분리발주제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환경영향평가기준을 확대적용하였다. 현행 평가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대기·수질·소음)만 정하고 있어 실제 평가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생태계보전 및 지역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지역환경용량을 고려한 오염원 입지 및 오염배출량 저감수준(협의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지속가능한 개발모델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환경평가기준으로 추가 설정함으로써, 개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 및 훼손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의무를 신설하였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는 공개의무규정이 없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 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관계자·주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평가내용의 고의적인 은폐 등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고, 평가서 초안 요약서는 인터넷 공고·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민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대체수단을 도입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을 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장이 이를 대신하도록 하여 주민의견 수렴 차질이 예방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개최하는 설명회 및 공청회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최 불가시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실력행사 등에 의한 사업추진의 지연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섯째,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주재자 선정제도를 신설하였다. 그간 사업자가 공청회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이해관계 조정시 마찰이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 주재자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 공청회의 주재자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의 의견진술요구 및 공청회를 주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과는 무관한 공정한 제3자를 공청회 주재자로 선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를 방지하고, 주민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평가대상사업을 확대 및 조정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환경훼손 정도가 큰 「산림법」상의 노선 총길이가 8㎞ 이상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과,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중 총면적이 20만㎡ 이상인 사업을 포함하여, 종전 17개 분야 62개 사업에서 64개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 평가대상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기존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 25만㎡ 이상이 평가대상인 것을 환경영향이 직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성면적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이 10만㎡ 이상인 것으로 조정하고,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변경 또는 규모 증가시 모호한 평가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시키는 등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평가대상규모 대비 사업규모 비율의 합이 1 이상인 것과 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협의 후 공정 등의 변경으로 새로운 오염물질배출 또는 오염배출량이 30% 이상 증가시 반드시 협의기관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사업별 특성 및 환경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조정하였다. 공사완료 이후 협의내용 이행사항 확인 및 환경영향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완료시 또는 공사완료 후 5년까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완료시, 공사완료 후 3년, 공사완료 후 5년 등으로 구분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주변 환경여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후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추가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실효성 확보가 과제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가용토지는 적으며 수자원이 넉넉치 않은 등 불리한 우리의 국토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주목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우리의 여건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포럼을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전과제에 대해 토론과 검토를 거듭하여 왔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서 작성·검토 방법의 표준화, 협의·검토 절차 투명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환경영향평가 관련 각종 자료들의 DB화 및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검토 초기부터 이해관계자를 최대한 참여시켜 논란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거듭나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승인기관, 지역주민 등 모든 관련주체들이 창조적·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마일리지제도의 공정 운영 강화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지난해 6월 정부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mileage) 공제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관조항은 그동안 항공사의 약속을 믿고 마일리지를 축적해 온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2월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몇몇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약관에 명시하였으며,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를 변경전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마일리지를 '덤'이나 '시혜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치부하고 마일리지에 대하여 고객이 갖는 기대와 신뢰를 외면한 채, 마일리지로 제공되는 보너스의 내용이나 사용기준을 사업상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약관심사 건은 그동안 횡행해 온 사업자의 부당한 마일리지제도 운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마일리지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할 것이다.

마일리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마일리지란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 고객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일정액을 적립시켜 주고 그것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일리지는 현금보다는 각종 포인트(point)·적립금·사이버머니(cyber money)·쿠폰(coupon) 등 금전 이외의 다양한 지불수단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마일리지가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미국의 항공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에 의해서 'AAdvantage'라는 상용고객(Frequent Flyer) 우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단골손님들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 주고 도장수에 따라 공짜 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 당시 미국 정부가 '항공산업의규제완화에관한법률'(Airline Deregulation Act of 1978)을 통하여 항공요금 책정에 대한 규제를 풀자 이를 계기로 항공사간에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이후 델타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잇달아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마일리지의 본질은 일종의 회원제 마케팅(membership marketing)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특정 회원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

마일리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적용을 강화하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마일리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마일리지 운용지침의 제정을 검토할 것이다.

하는 동시에 매출확대, 홍보비용 절감 및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 등 부수적인 사업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마일리지는 항공사·정유사·카드사·이동통신사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할인점·화장품가게·미장원·세탁소·제과점 등에 이르기까지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든지 업종을 불문하고 보편적인 경쟁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소비자가 각 업종에서 획득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관리해주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흩어져 있는 자투리 포인트를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로 교환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스와핑(point swapping)'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도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OK 캐쉬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일리지제도가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부가적인 고객서비스 수준을 넘어서서 제휴·가맹점간 마일리지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독자적인 수익모델 차원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마일리지 활용이 많아짐에 따라 마일리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31건, 2002년 41건, 2003년 6월까지 41건으로 매년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마일리지 자체에 대한 피해현황이 독자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업종별·상품별로 부가적으로 집계되어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인터넷쇼핑몰이 전체 피해건의 23.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용카드사 21.2%, 항공사 15.9%, 홈쇼핑업체 1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은품 제공내역을 임의로 변경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28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마일리지의 일정부분에 대한 사용을 제한한 것이 23.9%, 마일리지 지급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22.1%, 마일리지 전체에 대한 사용을 거부한 것이 18.6% 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 위해 법 적용 강화하고 제도 개선

앞으로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자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마일리지제도 운용에 대하여 소관 법령의 적용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마일리지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마일리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마일리지 운용지침의 제정을 검토할 것이다.

공정위 소관 법령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보호

정부는 마일리지 운용 사업자의 허위·과장광고나 불공정한 약관(계약)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첫째, 대다수의 사업자가 마일리지 운용규정을 약관에 명시하여 거래에 활용하고 있는바, 마일리지의 적립기준이나 사용조건 등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보하거나, 마일리지의 사용방법을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의 시정조치를 통하여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도모할 것이다.

둘째, 마일리지가 오늘날 일반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시·광고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사용의 제한적인 조건들을 명시하지 않고 서비스 내용이나 그 사용가능성을 과장하는 표시·

광고 행위 등에 대하여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마일리지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셋째,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온라인상의 거래에서도 마일리지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마일리지를 온라인상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많아지고 있는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강화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다.

넷째, 현재까지는 마일리지 문제가 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가 주로 검토되고 경쟁법 적용은 2차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일리지의 적립기준이나 사용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나 마일리지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사업자가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마일리지제도 운용의 공정화 위한 별도의 지침 제정 검토

한 리서치 전문회사의 조사 결과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포인트 및 제휴서비스 등 마일리지 서비스가 최우선 고려사항(19.9%)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일리지의 내용은 상품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마일리지 운용현황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사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마일리지 관련 규정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이 있다. 이 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일리지제도의 폐지 또는 업체간 통합으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조건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침은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여 마일리지 관련 피해나 분쟁을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몰과 같은 온라인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온라인 업체 외에 오프라인 업체까지 적용가능한 별도의 지침(가칭 마일리지제도 운용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자들의 마일리지제도 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강화를 위하여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마일리지에 대한 적립기준, 사용방법, 변경조건, 유효기간, 회원 탈퇴시의 처리방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일리지제도 정착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 필요

마일리지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관련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마일리지 적립방법·기준, 활용가능성, 이용범위, 교환·전환·통합사용 가능성, 유효기간, 회원탈퇴시 처리, 제도의 사후변경 가능성 등과 같은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항공사는 탑승거리 또는 카드이용 1천원당 1마일,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0.1~1%, 이동통신사는 이용요금 1천원당 10점 적립 등의 예와 같이 마일리지 적립방법·기준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에서도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장 유리한 사업자가 어느 사업자인지를 검토한 후 거래상대방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는 종류에 따라 현금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현금으로 환불이 되는 것과, 단순히 사은품

마일리지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관련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마일리지 적립방법·기준, 활용가능성,
이용범위, 교환·전환·통합사용 가능성, 유효기간 등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신청만이 가능한 것 등으로 그 활용가능성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혜택이 많은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셋째, 항공사는 1만마일, 카드사는 1만~3만점 등에 도달해야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마일리지는 최소 사용가능 기준이 있다. 이러한 최소 사용가능 포인트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범위 특히, 제휴업체의 수·위치·분포 등에 따른 제휴사 이용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최근에는 각 업종에서 획득한 마일리지의 상호 교환, 일부 카드사와 같이 누적마일리지를 타업종의 마일리지로 전환, 제휴·가맹점간의 마일리지 통합사용 등을 허용하는 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마일리지의 교환·전환·통합사용 가능성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항공사나 인터넷쇼핑몰 등과 같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업종도 있지만, 카드사나 이동통신사 등 일부 업종은 통상 5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적마일리지를 소멸시키고 있으므로 마일리지제도에 가입하기 전 또는 가입한 후에는 이러한 소멸기간도 살펴보아야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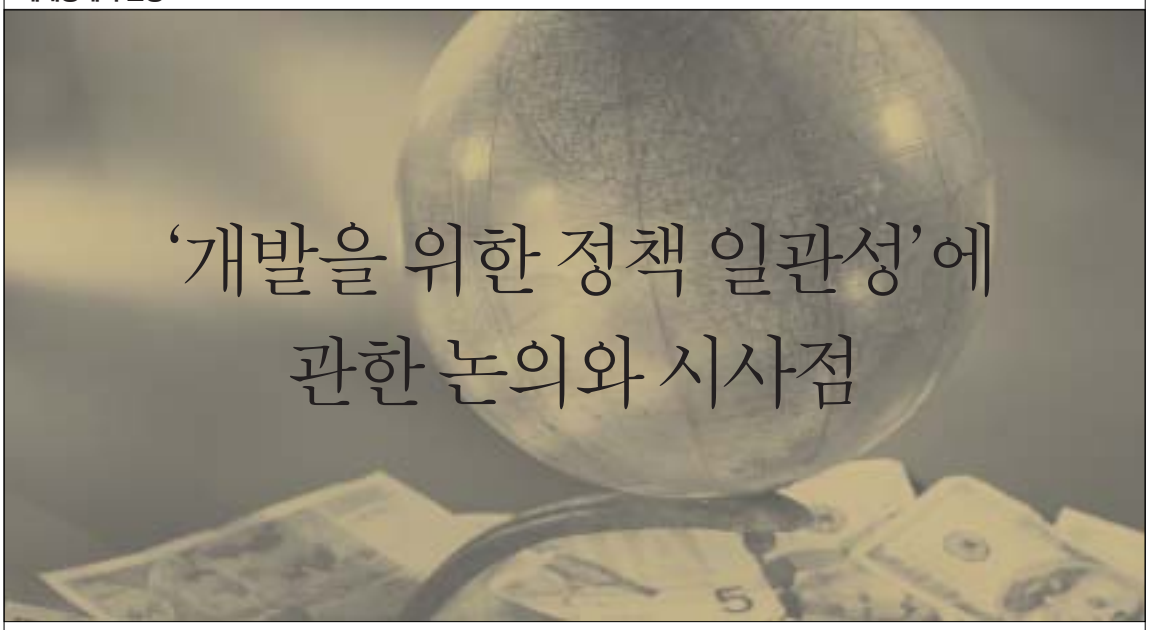
일곱째,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 일부 카드사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을 주기도 하며 일부 인터넷쇼핑몰은 재가입시 과거 마일리지를 부활시켜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원탈퇴 전에는 기존 누적마일리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항공사나 카드사 등과 같이 일부 업종은 마일리지 지급방법이나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후 변경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변경시 통지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유예기간은 충분한지 등에 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마일리지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정보통신부 등의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공하기로 했던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분쟁조정기관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모색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관련 자료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마일리지의 허와 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2004. 3. 1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KFTC경쟁이슈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항공사 마일리지 보너스 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2003. 6. 12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보도자료 참고)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권해룡
駐OECD대표부 참사관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 냉전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국제체제와 질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냉전시대에 국가와 국가,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를 나누었던 벽들(walls)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념과 정치가 모든 것의 위에 섰던 시대에서 벗어나 국가들은 새로운 체제와 패러다임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

세계화 시대

냉전이 끝나자 미국도 자유진영 캠프에 동참하였던 우방국가들에 대해 예전과 동일하게 대하지 않았다. 동맹국가의 냉전시 군사적·정치적 중요도가 냉전 이후의 경제적·국제정치적 가치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패러다임으로는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미국 등 강대국들은 이러한 국제정치체제와 질서의 변화를 주도하였고, 여타 선진국들은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나름대로 자국의 정책과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발도상국들도 국제적인 변화의 기미를 희미하게나마 알아차렸으나, 새로운 질서에 대처할 적절한 대응방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국제체제의 변화 즉,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는 이러한 현상 또는 체제(system)는 국제정치적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시장이 지배하는 체제(free market capitalism)라 할 수 있는 세계화를 가져와 국가간에 존재했던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린 것은 세 가지 분야의 민주화였다.[1] 첫째는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how we communicate)의 변화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의 민주화라고도 할 수 있다. 컴퓨터화·디지털화·인터넷 등으로 지구상 수억의 인구가 정보를 동시에 교환할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駐OECD대표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은 개도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의 정책들이 개도국 빈곤해소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회원국의 정책이 개발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파악해 2005년 각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수 있어 사업방식과 생활양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한 부의 창출도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투자방법의 변화(how we invest)로 금융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금융기법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외국 회사가 발행한 공채를 거래할 수 있고, 저평가된 정크 본드를 사고 팔아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셋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배우는 방법(how we learn about the world)의 변화이다. 이는 정보의 민주화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국경 너머 세상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국가가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하여 국민들을 통제하거나 소외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세계화와 빈곤

세계화 시대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 문제 즉, 개발문제(development issue)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사람들은 세계화의 추세를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혜택과 비용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세계화를 활용하여 혜택을 극대화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피해를 보는 국가들도 있다. 세계화 반대세력은 물론 세계화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세계화 혜택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관리체제(global governace)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화가 가져온 대표적인 재앙이 개도국의 빈곤 심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많은 액수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제공하였고, 이에 힘입어 개도국들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크게 진전이 없었다. 세계화의 시대인 오늘에도 빈곤층 인구는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재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효과로 인해 개도국의 빈곤해소는 훨씬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부자국가와 가난한 국가간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과연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듯이 상위 20%가 부의 80%를 가지는 이른바 20:80의 원칙이 국제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것일까? 각국 정부는 국내의 부의 불균형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빈곤문제를 그대로 두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두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해결방법을 알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이 처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치유책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 개도국의 빈곤문제가 선진국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의 지속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2000년도 통계를 보면 OECD 국가의 수출의 3분의 1이 개도국으로 가고 소비하는 석유의 절반을 개도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OECD 국가에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는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선진국의 경제 번영은 개도국의 성장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개도국의 값싼 상품은 선진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며, 선진국은 대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도국과 다른 선진국에 수출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개도국의 빈곤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개도국 인력이 선진국으로 대거 이동하는 것이다. 지금도 후진국의 인구가

선진국의 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나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30년 이내에 전세계 인구는 20억이 더 늘어날 것이며, 이 중 95%가 개도국에서 태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개도국이 지속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지 못해 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경우 이들이 생존을 위하여 선진국으로 이주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세계화가 가져온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개도국의 인구폭발, 개도국의 저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은 필연적으로 개도국의 빈곤해소에 선진국이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논의동향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 천년개발목표(MDG :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정하였고, 2002년 몬트레이 개발재원국제회의와 요하네스버그 지속발전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을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 지속발전을 달성하자는 합의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이루어졌다. 선진국은 원조의 양을 확대하고 원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무역·농업·투자 등 제반 정책과 개발정책 간에 일관성을 유지(PCD :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할 것임을 약속했다.

반면에 개도국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부패방지,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자체의 건전한 가버넌스(good governance)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즉 개도국과 선진 공여국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mutual accountability) 빈곤해소를 추진해 나가자는 범세계적인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합의를 기초로 OECD나 G8 정상회의 등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CD)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2002년 OECD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제반 정책이 개도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PCD에 대하여 OECD가 연구하도록 합의하였다. OECD는 PCD 담당관을 두어 회원국의 무역·농업·투자·이주·기술이전 등의 정책이 개발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수평사업을 여러 분야 전문가의 참여하에 진행중이며 2005년도 각료이사회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이란?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PCD)이란 선진국의 무역정책, 보조금 등을 포함한 농업정책, 투자정책, 이주정책, 기술이전정책들이 개도국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선진국의 이러한 정책들이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정책의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개도국에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도국이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막대한 양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PCD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2002년에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제공한 ODA는 약 580억달러이나 선진국이 자국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보조금은 ODA 규모의 5배가 넘는 3,200억달러 이상이다. 수십억의 인구가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고 있는 반면 EU의 소들은 하루에 국가로부터 약 2달러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것이 PCD인 것이다.

PCD를 이루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위해 개발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DA를 제공하여 기술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의료·보건·교육분야 등 분야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나 집행기관은 대체로 정부 내에서 힘이 미약하다. 개발정책과 무역정책이 서로 충돌할 경우 개발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스웨덴·일본 등은 산업부·농림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 범정부적 PCD 제고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정부의 입장을 조정,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개도국의 빈곤해소는 원조로서만 해결될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리 정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대안을
미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가 없다. 2002년도 ODA 규모가 약 580억달러이나 이는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국제자본 중 일부에 불과하다.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재원 즉, 민간분야의 직접투자가 개도국으로 유입되어 개도국의 개발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개발적인 투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로 PCD를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이란 결국 개발분야와 농업분야·무역분야 등 다른 분야 간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PCD를 이루기 위해 희생되는 다른 분야에 대한 설득과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은 국내 정치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와 리더십이 요구되나 쉬운 일은 아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OECD에서 개최된 의회지도자를 위한 PCD 세미나에서 OECD 국가의 일부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개발정책 일관성을 위해 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찬성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재선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이 요구되는 분야

OECD의 연구에 의하면 PCD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경제·사회·과학기술 정책 등이 다 포함된다.[2] 이를 살펴보면 무역정책, 농산물 교역, 다자간 및 특혜 무역체제, 국제어업협정, 성평등, 식량원조, 식량안보, 환경 및 천연 자원, 생명공학, 외채 탕감, 노동문제와 국제이주, 불법 마약, 국제금융체제, 평화와 무력분쟁, 참여 민주정치와 건전한 관리체제 등이다. 선진국들이 이 분야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PCD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농업정책, 외채 탕감 그리고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에 대해 살펴보자.

무역정책

무역정책 분야 중 관세인하는 많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개도국은 경쟁력이 있으나 OECD 국가들이 민감하게 취급하는 섬유·의류·신발과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아직도 부과되고 있다.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선진국의 비관세장벽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개도국은 정부 재정의 많은 부분이 관세수입으로부터 나오므로 개도국의 관세인하는 선진국의 관세인하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PCD를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의 현안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무역정책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관세인하 등 여러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지속발전과 빈곤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문제이다. 두 번째로 개도국들이 무역개방과 세계화로부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해줄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이다. 세 번째로 개도국들이 선진국에 수출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등에 있어 개도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개도국들이 관세인하·비관세장벽 해소를 얻어내기 위해 선진국에게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는가도 주요한 이슈가 된다.

농업정책

개도국에 있어 농업은 가장 주요한 소득원이며 빈곤해소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개도국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상당수 농산물 즉, 면화·설탕·쌀 등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베넹·부르키나파소·차드·말리의 면화는 EU 면화보다 생산성도 높고 가격경쟁력이 있으나, EU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나 EU 내에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제 농산물 교역을 왜곡하는 선진국의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와 수출 보조금은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PCD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첫째,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로 국내 농산물 가격지지와 수출 보조금을 삭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최빈개도국과 식량을 수입하는 개도국이 농업 생산성과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셋째, 선진국들은 개도국이 필요한 위생규정·라벨링 등 필요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채 탕감

선진국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외채 탕감 정책은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빈개도국의 모든 외채를 탕감(forgiveness)해 주지는 않고 있으나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외채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현재 외채과다빈곤국(HIPC :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니셔티브에 의해 26개국이 혜택을 받아 외채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혜택을 받아 개도국의 외채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외채 탕감 분야에서의 PCD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원조공여국들은 HIPC 국가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그 나라의 빈곤해소전략에 일치시켜야 외채 탕감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 둘째, 공여국간의 공조를 통해 외채 탕감과 빈곤해소 간에 보다 정책 일관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가 외채 탕감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금융체제

세계화의 특징은 무역과 금융 자유화로 대별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자유화는 국제 자본의 규모나 이동속도로 인해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1990년대에 일어난 금융위기는 이를 입증해 준다. OECD도 개도국이 금융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규제 등의 제도적 능력배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여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다. 금융안정포럼(FSF : Financial Stability Forum), 개도국도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에 참여한 G20 설치 등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은 별로 없다.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매우 첨예하다. 개도국의 환율제도 문제, 국제 단기 자본이동의 규제 문제, IMF·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분율이나 의결권의 변경 문제, 점진적인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선진국과 국제 자본의 이해 문제, 외채 탕감에 모든 선진국들의 동참 문제 등이 PCD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선진국의 이해타산 때문에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단기간내 개도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 노력

선진국들은 대체로 PCD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에서 PCD 제고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반대하는 회원국은 거의 없다. 다만, 자국정책을 고려하여 추진방법, 시기 및 사업범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이 개방되어 있는 국가나 개방 시스템을 가진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이 PCD 사업에 적극적이다. 또한 이들은 공적개발원조(ODA)/국민총소득(GNI) 비율이 0.7%를 초과

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그중에서도 스웨덴은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자국의 PCD를 평가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정책들 즉, 여성정책·농업정책·무역정책 등에 대한 정책을 PCD 관점에서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기술하고 있다. 외교부가 PCD 제고 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스웨덴은 자국의 PCD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자국의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리 정책의 현황평가 필요

PCD란 세계화의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선진국은 제반 정책을 개도국의 빈곤해소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 분야에서는 이미 도하개발라운드에서 협상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을 위해 선진국이 일정한 정도를 양보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PCD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G8 정상회의나 IMF·WB 연차총회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개발문제가 제일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고, OECD 등에서는 PCD 사업이 점점 중요성을 얻어가고 있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회원국의 원조정책을 검토할 때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원조정책 검토회의시 미국과 EU의 농업보조금도 PCD 측면에서 회원국들의 비판을 받았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그리 전향적이지 못하다. 우선 개발정책 자체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소규모의 ODA, 대부분의 원조가 구속성 원조(tied aids)이며 원조의 형태도 프로젝트 위주로 되어 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지만 우리의 통상정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 농업정책, 환경정책 등 제반 정책도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과 다른 정책들도 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제반 정책의 현황이 정책 일관성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작성한 체크 리스트를 참조하여 분야별로 우리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4]

PCD는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주권국가의 정책자율성(policy space)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개도국도 배려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PCD가 향후 구속성을 띠고 우리 앞에 등장할 때가 올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PCD에 대한 우리 정책의 현황을 평가하고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대안을 미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모두 참가하는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분야별 이해관계 조정, PCD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 대한 보상 등 제반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화 시대라는 것은 결국 국제 규범과 국내 제반 규범이 서로 수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국가이익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 주

1) 토마스 프리드만, *Lexus and Olive Tree*, 45p.
2) OECD 빈곤해소 가이드라인 Volume 2
3) *OECD Policy Coherence Matters*, 1998.
4) *OECD DCD/DAC(2001)*14 참고



DDA 농업협상 동향



김정한
駐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농산물 무역이 본격적으로 GATT 체제에 편입된 것은 10년 전 타결된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였다. UR 농업협상에서 협상 참여국들이 농산물 수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와 각종 국내·수출보조에 대한 규율에 합의함으로써 농산물 무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UR 협상이 농산물이 GATT 체제에 편입되는 디딤돌이 되었다면, DDA 농업협상은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한층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철폐를 통해 각국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국제 농산물시장에 있어 무역왜곡적 요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논리상 시장개방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 농업이 한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전반적 분야에서 가지는 의의와 비중을 감안할 때 농산물시장 개방이 미치는 충격 또한 막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농업협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 있어 중요하고 민감한 협상분야이며 각 국가간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분야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DDA 농업협상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DDA 농업협상의 배경과 주요 논의의제,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駐제네바대표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DDA 농업협상의 배경과 주요 협상의제

1994년 4월 15일 GATT 회원국들이 최종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종결된 UR 협상부문 중 농업협상은 그 정치·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분야였다.

UR 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 무역에 있어 공정경쟁 도입을 목표로 했던 만큼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등 분야에 있어 무역왜곡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두

DDA 농업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철폐를 통해 각국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을 확대하고 국제 농산물시장에 있어 무역왜곡적 요소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체계화된 농산물 세계무역 규범인 WTO 농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우선 시장접근 측면에서는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비관세장벽이 관세화되었다. 그 의의는 매우 큰데, 특히 이후 농업협상시에는 관세인하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함축적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보조 측면에서는 허용대상과 감축대상을 구분하여 감축대상에 대해서는 감축 내지는 철폐하도록 하였다. 다만, 생산제한하 직접지불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하에서 감축 이행을 면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출보조와 관련해서도 감축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WTO 농업협정 제20조는 UR 협상 이후로도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위한 개선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의 농업협상이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WTO 농업협정문에서 이미 추가 협의를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농업협상은 UR 이후 세계무역협상의 旣설정의제(BIA : Built-In-Agenda)라고 볼 수 있다). 협상 개시에 따라 2001년 1~3월간에는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2002년 3월까지 관세감축, 보조금 감축 방법 등 각 의제별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농업협상이 진행중이던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제4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동 회의에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출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미 진행중이던 WTO 농업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동 각료회의에서는 시장접근, 수출경쟁 및 국내보조 등 3개 분야에 있어 협상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2003년 3월 31일까지 협상세부원칙(modalities)을 마련하고 제5차 각료회의 이전에 각국 양허계획을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농업협상의 주요 논의의제는 다음과 같다.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WTO 회원국들은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①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②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③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농업협상 목표로 설정하였다.

시장접근의 경우 UR 협상에서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 장벽이 관세화된 상황이어서 DDA 농업협상시 우선 관심사항은 관세 감축에 있다 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TRQ(관세할당) 관리 방법, SSG(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의 개선 여부 또한 회원국들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 UR 협상 이후 정책 유형에 따라 시장가격지지 등의 감축대상 보조, 연구, 식량안보 및 재해복구 차원 등의 허용대상 보조를 구분하고 감축대상 보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결정한바, DDA 농업협상에서는 감축대상 보조의 추가적 감축과 허용대상 보조의 보다 엄격한 규율 그리고 일정조건하에 감축이 면제되었던 생산제한하 직접지불 정책의 감축 등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고 있다.

수출보조는 주로 농산물 수출국에서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보조를 의미하며, 현재 케언즈 그룹 국가들과 여타 개발도상국 등이 수출보조 철폐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농업협상 동향과 향후 전망

농업협상과 관련한 국가별 입장은 실제로는 위에서 설명한 각 의제(분야)별 입장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지만, 간략하게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UR 협상이 농산물 세계무역 자유화 및 각국 농업개혁 등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개하며, WTO 농업협상에서 보다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국들의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호주·뉴질랜드·캐나다·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 보조금 지급이 미미한 케언즈 그룹 국가와 달리 국내보조 철폐 등 일부 의제에 있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EC·일본·노르웨이·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UR 협상 결과에 따라 농산물 수입국보다 수출국의 이해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등 측면에서의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NTC : non-trade concern)을 감안, WTO 농업협상 추진에 있어 신축적이고 점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협상진전 동향은 다음과 같다.

회원국들은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합의를 위해 논의를 계속하였으며 2002년 12월 하빈슨(Harbinson)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그간 논의동향을 정리, 논의 진전을 촉구하는 종합보고서(overview paper)를, 2003년 2월과 3월에는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관련 의장(안)을 작성·배포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입장 대립은 지속되었으며, 결국 제4차 각료회의시 설정된 합의기한(2003년 3월 31일) 내에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고 만다.

이후 회원국들은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골격(framework) 마련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는데, 2003년 8월 미국과 EC가 공동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에 영향을 받은 브라질·아르헨티나·인도네시아 등 일부 케언즈 그룹 국가를 비롯한 일군의 개발도상국들(이를 G-20 그룹이라고도 한다)이 선진국의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 철폐와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등을 주장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결과 협상은 미국, EC, 각종 보조 철폐와 획기적 시장접근 개선을 주장하는 케언즈 그룹 등 수출국, 우리나라 등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주장하는 수입국 그룹(이를 G-10 그룹이라고도 한다), 이외에 시장접근에 있어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청하는 국가군(이를 SP 그룹이라고도 한다) 및 G-20 그룹 등 간에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체 DDA 협상 진전에 있어 가장
핵심 분야인 농업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요구가 보다 높아질 경우 미국·EC 등 주요국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회원국간 일정수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그간의 비공식협의 내용을 반영한 각료회의 의장(안)(Derbez text)이 제시되었다.

Derbez text에서는 관세감축의 경우 UR 방식과 스위스방식(고율관세는 대폭 인하, 저율관세는 소폭 인하) 및 무세화 등 방식을 조합하여 관세를 감축하되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국내보조의 경우 UR 당시와 달리 총액뿐 아니라 품목별로도 보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및 식량원조 등 모두에 대해 수출보조에 상응하는 감축의무를 적용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동 text는 개도국의 경우 수입에 민감한 특별품목(SP)을 설정하여 TRQ 증량을 면제하는 등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등에 있어 개발도상국 우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Derbez text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료회의가 결렬되어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동 의장(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관세상한을 비롯하여 수입국들로서는 수용곤란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등 수입국 그룹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된다.

지난해 제5차 각료회의 이후로도 상기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바, 수출보조 철폐 시점 및 일부 국내보조 감축 방식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 국가들은 Derbez text 내용 중 관세상한이나 TRQ 의무적 확대 등에 강한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향후 협상 전망을 살펴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농업협상은 미국, EC, G-10 그룹, G-20 그룹, SP 그룹 등 다양한 협상 그룹의 활동으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선진국의 보조 철폐 문제와 SP 개념 및 SSM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미국·EC와 G-20 그룹간 협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G-10 그룹,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선진 케언즈 그룹, SP 그룹 등과의 협의가 병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수출보조와 국내보조 등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전체 DDA 협상 진전에 있어 가장 핵심 분야인 농업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요구가 보다 높아질 경우 미국·EC 등 주요국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회원국간 일정 수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여타 농산물 수입국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부각시키고 각국의 이해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하는 한편, 주요 협상 국가들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용어해설

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wrap account)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성향에 맞춰 고객의 돈을 관리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증권사의 자산관리사(FP)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종목까지 추천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믿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는 예탁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이익을 낼 수 있다.

랩어카운트에는 일임형과 자문형 두 가지가 있다.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고객의 돈을 받아 투자자문을 하는 수준에 그치나,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말 그대로 증권사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 주식형 펀드 등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운용까지 모든 자산운용 업무를 대신해 준다. 엄격한 의미의 랩어카운트는 일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일임형은 예탁자산의 30% 이상을 고수익 채권이나 고수익 채권펀드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는 투신사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 일임형은 허용하되 일임매매 범위를 간접투자상품으로 제한한 셈이다. 핵심인 주식이나 채권의 일임매매는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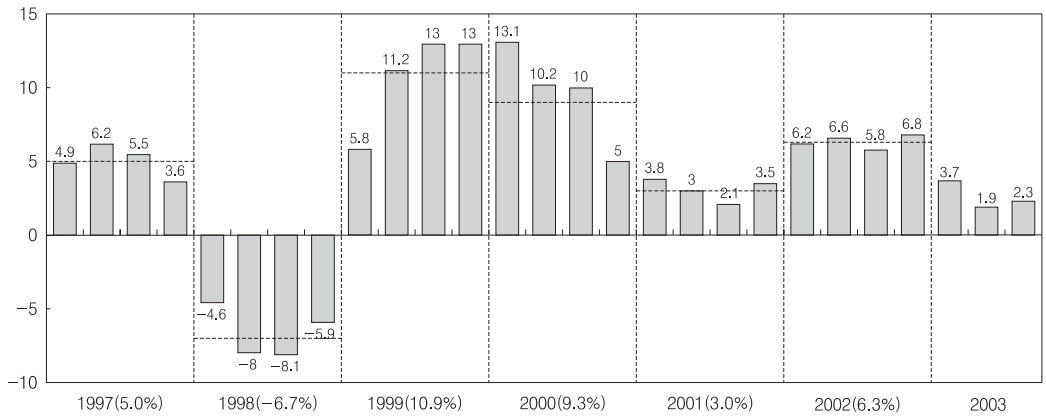
원유·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담 커지는 국내경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급증세로 제조업 생산과 출하 등이 증가하고 경기관련 지표인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경기회복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체감경기는 지표경기의 개선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지난해 투자의 급격한 침체를 상쇄해온 건설투자의 증가세 또한 최근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국제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최근의 우리 경제 회복세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물가의 상승을 초래해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5%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국제원유와 원자재가격의 급등을 고려하지 않은 전망수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그림 1〉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 대비)



주 : 그림의 가로축 점선과 괄호 안은 각 연도의 평균 GDP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3. 11. 21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로 생산과 가동률이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제 체감경기는 지표경기의 개선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정적 충격이 현실화할 경우 당초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가중되면 채산성 악화뿐만 아니라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로 결국에는 생산차질과 고용감소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원유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국내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을 감소하여 현재 경기회복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는 소비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은 지난 3월 12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돌발적인 변수로 일시적인 충격에 휩싸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 노력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주가는 대세상승을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외의 경기상황에 따른 정책금리의 동결조치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 비

소비는 실질국민총생산의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여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이 되었다. 소비부진의 원인은 세계적 경기침체 등의 대외경제요인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내부환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대출이 무분별하게 급증한 데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신용대출이 억제되면서 가계부문의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소비활동의 위축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가계의 미래 소득창출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가계의 소비계획을 연기하거나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해 소비는 투자회복과 함께 경기회복의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다행히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등 대외경제여건이 긍정적이고, 가계부채도 지난해까지 상당한 조정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에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소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완만하나마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경제주체들이 소비한 실적을 수치화해 나타난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기대지수와 소비자평가지수는 기준치인 100 아래에 머물고는 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개선 추세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소매 판매,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1월중 각각 2.5%, 8.4% 감소로 나타나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소비와 관련된 주요 변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우선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인 반면 원유와 원자재가격의 급등세는 교역조건의 악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실질구매력을 떨어뜨려 소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소비회복의 관건은 현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400만명에 가까운 신용불량자 처리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조속한 소비회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투 자

투자는 설비투자의 침체가 여전히 호전될 조짐을 보이

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도 지난 2~3년간 급증세에서 지난해 4/4분기 이후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에는 20%를 상회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 조정을 거치면서 1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지난 2003년 건설투자의 비중은 16~17% 수준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을 대신해 수출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4/4분기중 정부의 10.29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투기적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억제책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세는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건설투자 관련지표들의 추이는 건설투자의 둔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1월 41.5%의 큰 폭의 감소를 보이며 지난해 8월 이후의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국내건설수주도 14.3%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설경기실사지수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건설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철근과 모래 등 건설자재의 수급과 비용 등이 모두 크게 악화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더욱 나빠졌기 때문이다.

통상 건설투자의 부진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SOC 건설을 확대하거나,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해 건설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으나, 올해에는 정부의 SOC예산 삭감과 부동산 안정대책 등에 따라 정부의 조치에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설투자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지난 2003년에 국내총생산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과거 13~15%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비투자가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된 이유는 이라크전쟁, 북핵리스크, 노동 및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중첩적으로 발생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둔화 예상과는 대조적으로 설비투자는 10% 내외의 증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체되는 모습이다. 1월중 설비투자 추계와 기계류 내수출하는 각각 3.1%, 9.0%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2/4~3/4분기의 극심한 침체상태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부진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국내정치가 불안하고, 가계부채와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동기를 유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 출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 제품과 자동차·선박의 수출 호조로 45.9%의 급등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수입은 국제원자재 및 원유가격의 상승과 수출 호조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여 26.4% 증가하였다.

지난 2월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더욱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억5천만달러 흑자를 보여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20억달러대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對중국(71.0%)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32.8%)·EU(36.0%)·일본(52.6%) 등 여타 지역으로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수출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출이 지금처럼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물가의 상승을 초래해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연간 123억2천만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에도 23억4천만달러로 9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월말 현재 1,63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물 가

소비자물가는 2003년 국내경기 침체, 임금상승률, 원/달러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으로 2002년 2.7%보다 높아진 3.6% 상승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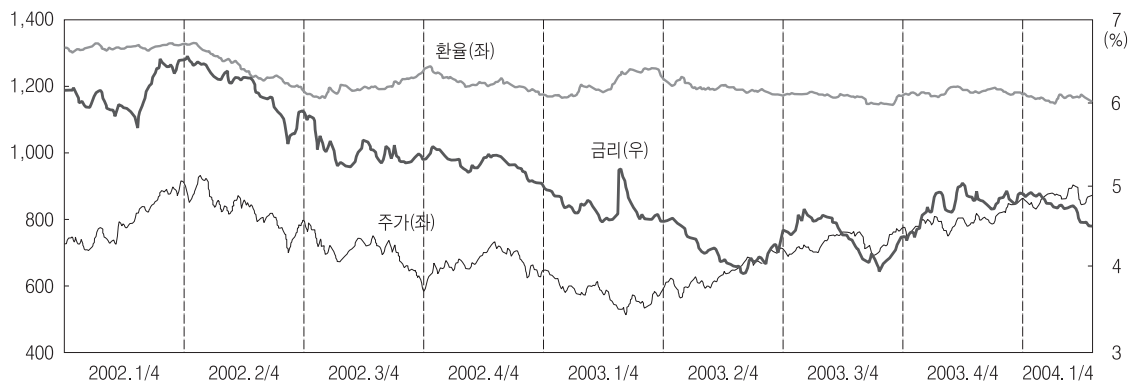
지난해 4/4분기 이후 국제원유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물가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1월 0.6%, 2월 0.4%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근원물가는 물가상승을 주도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0.1% 상승에 그쳤다.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원유와 원자재가격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 국내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내수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상승이 지속된다면 가계의 실질구매력 감소로 소비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고, 수출기업들의 원가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지난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정책당국의 신속한 안정화 조치로 빠르게 안정되었다.

〈그림 2〉 환율·금리·주가 추이



주 :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사용함.
자료 : 한국은행

주 가

주가는 연초 821.3선에서 출발한 뒤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며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3월 4일 현재 국내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사상최고 수준인 43.1%에 달하였다. 주가는 올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3월 4일에는 연중최고 수준인 907.4선까지 상승하였으나,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의 확산으로 848.8선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노력과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3월 18일 현재 872.8선까지 회복하였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원유와 원자재가격의 부정적 충격과 함께 대통령 탄핵정국이 장기화되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 불안이 지속될 경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금 리

금리(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6월 중순 사상최저 수준인 3.95%까지 떨어졌으나, 세계경기 회복 기대감과 국내주가의 상승으로 8월초에는 4.7%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다시 하락하여 10월초 3.98%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기대가 가시화되면서 국제금리의 상승과 함께 지난 12월에는 5%까지 재상승하였다.

금리는 올 1월에 지난해 연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월에 미국의 고용상황 부진으로 정책금리의 동결과 국내의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바탕으로 다소 하락하여 2월말 현재 4.78% 수준을 보였다. 금리는 경기여건과 물가수준, 채권의 수급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대다수 시중전문가들은 향후 금리는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데에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경기회복과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해외금리가 상승하면 국내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환율하락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대로 금리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

환 율

원/달러환율은 2003년 연평균 1,191.6원으로 2002년의 1,251.4원 대비 5%의 원화가치가 상승하였다. 이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화의 세계적인 약세 기조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외환시장의 달러화 공급 우위의 시장상황이 더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출 호조로 해외에서의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고, 국내주식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가세함으로써 원/달러환율의 하락을 촉진하였다.

원/달러환율은 올 들어서도 하락하는 모습이다. 2003년 12월말에 1,200원으로 마감한 원/달러환율은 1월 1,184원, 2월 1,167원 등 하락세에 있다. 2월 18일에는 올해 최저 수준인 1,152원까지 원화가치가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12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영향으로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충격에 휩싸이며, 원/달러환율이 1,18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정부당국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의 노력으로 외환시장은 안정을 되찾으며 3월 18일 현재 원/달러환율은 1,160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대부분의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원/달러환율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국내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등 외환수요를 초과하는 외환공급의 우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경 기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로 생산과 가동률이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도소매 판매, 설비투자 추계 등 소비와 설비투자의 내수 부진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투자는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 다행히 소비자심리지수가 완만하나마 꾸준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한편, 1월중 서비스업 활동은 1.7% 감소하여 내수 부진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활동은 내수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유발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 활동의 부진은 국내 고용상황의 악화를 초래하여 실업률을 상승시킨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90만명으로 1월보다 5.4%나 증가하고, 실업률도 3.9%로 2001년 4월의 3.9%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9.1%에 달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당초 전망에서 고려치 않은 국제원유와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김윤기 KDI 거시경제팀 주임연구원〉

이 글은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경제정책자료·통계자료·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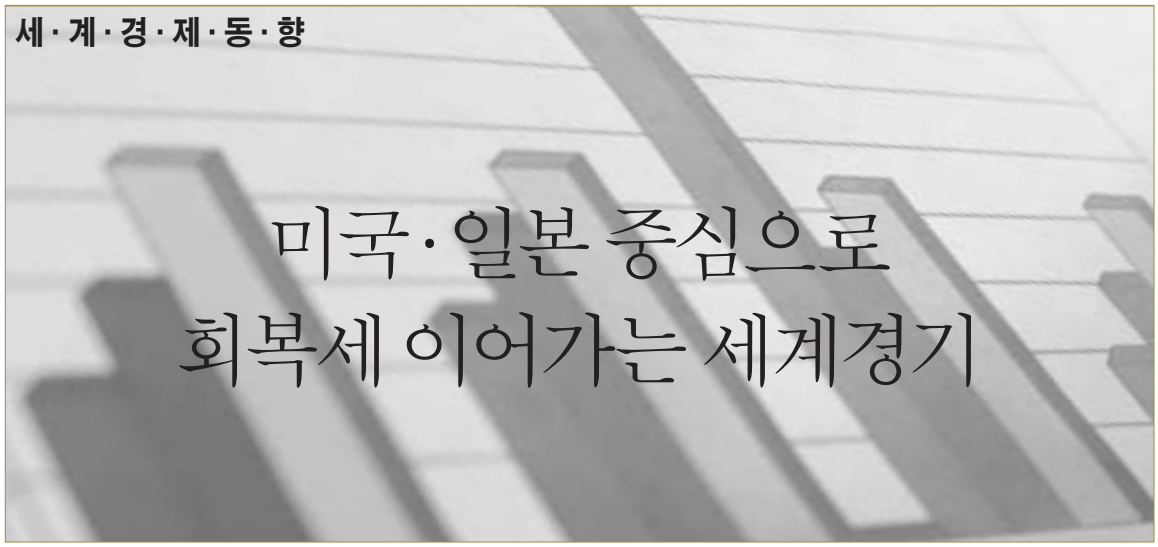
무액면주식(no-par value stock)

주권에 액면을 기재하지 않고 단지 회사의 총자본에 대한 비율만을 표시한 주식을 무액면주라고 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미국·캐나다·이탈리아·일본 등에서는 액면주 발행과 더불어 무액면주 제도가 벌써부터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12년 이래 은행·보험회사 등 특수한 회사를 제외하고 무액면주의 발행이 널리 보급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종래 우리나라와 같이 무액면주의 발행을 금지하였으나 1950년의 개정 상법에서 무액면주의 발행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때마다 주식의 발행가액이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발행의 기준액이 없기 때문에 발행가액은 그 금액을 자본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계리할 수 있다.

무액면주식에는 기재식무액면주(記載式無額面株)와 진정무액면주(眞正無額面株)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권에 권면액(券面額)의 기재는 없으나 그 정관에 그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의 규정이 있고, 그 가액 미만으로는 주식의 발행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그 가액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고 있다. 후자는 주권이나 정관에도 권면액 또는 동일한 작용을 하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미국·일본 중심으로 회복세 이어가는 세계경기

미국경제는 기업들의 자본지출이 확대되고 수출도 해외수요에 의하여 견실하게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증가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소비지출의 회복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주택건설부문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어지면서 조정되는 모습이다.

일본경제는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과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수요에 의하여 주도되는 경기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실질임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는 부진의 정도가 완만하게 완화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유로경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부진하며, 생산도 소폭의 증가세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고용사정은 여전히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경기관련 심리지표들은 완만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국경제는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경기과열과 과잉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수출이 세계경기 회복세와 경쟁국 통화에 비하여 약세인 위안화의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도 임금소득이 높아지면서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내외로 낮추고 과잉투자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등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반전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달러화는 올 2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반전되었다. 일본 엔화가치는 달러화에 대하여 2월 12일 105.4엔에서 3월 5일 112.1엔으로 6% 이상 하락하였고, 유로화가치도 달러화에 대하여 2월 9일 0.787유로에서 3월 4일 0.820유로로 4% 가량 하락하였다. 이러한 달러화가치 상승의 배경에 대하여 경제전문가들은 먼저 미국경기가 일본이나 유럽보다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엔화환율 방어를 위하여 2월중에만 3조3천억엔 규모의 자금을 외환시장에 투입하였으며, 또한 2월말 쾰러 IMF 총재는 재정·금융정책을 추가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상존하는 일본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외환시장 개입은 디플레이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한편 유로지역은 당초의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올해 안에도 본격적인 경

세계경기는 선진국들의 경기지표들이 개선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소비지출 둔화 조짐, 일본의 디플레이션, 유로화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로지역 등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의 장애물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다.

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확산되었고, 또한 독일과 프랑스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유럽중앙은행(ECB)에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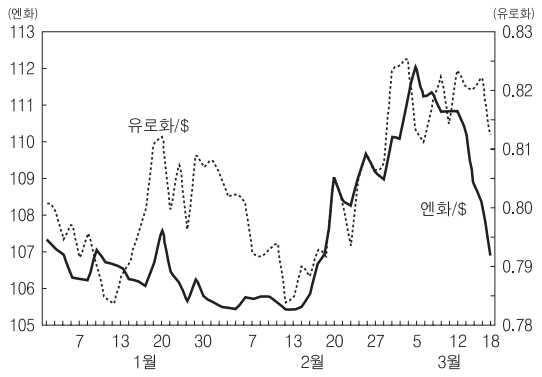
그러나 3월초 이후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하여 0.82유로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여 3월 18일 현재 105.9엔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으로 첫째, 일본경기의 회복세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되어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둘째, 일본 정부도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축소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셋째, 미국 중앙은행 Fed의 그린스펀 의장이 달러화가치의 하락은 재정적자 부담을 경감시키며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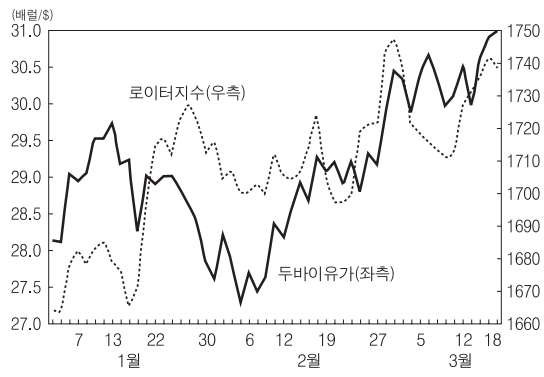
지난 2월 1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는 회원국들의 현 생산쿼터 준수와 4월 1일부터 일일 100만배럴 감산계획을 결정하였다. 이후 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가 의존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2월 9일 배럴당 27.4달러에서 3월 2일 30달러선을 돌파하였고, 3월 18일 현재 31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유가가 OPEC의 목표범위(22~28달러)를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OPEC이 감산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의 석유장관은 현재의 고유가 및 낮은 재고수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감산연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감산결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베네수엘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현재의 목표유가 범위를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3월 18일 OPEC 의장은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부담이 되는 점은 우려스럽지만 OPEC은 쿼터량을 초과생산중이며 현재의 유가수준은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의 계획대로 감산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림 1〉 엔화와 유로화 추이



〈그림 2〉 유가와 로이터지수



원유 이외 비철금속류 및 곡물 등 주요 원자재가격도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와 일부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특히 2월중에는 銅이 칠레 및 캐나다의 주요 광산의 노사불안으로 18%나 급등하고, 옥수수도 주산지의 수확감소 예상으로 7% 상승하였다. 대표적인 원자재가격지수인 로이터지수는 3월 18일 현재 1,739를 기록하여 2월 20일(1,697) 대비 2.5%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0% 정도 높은 수준이다(〈그림 2〉 참조).

주요 국가들의 경제동향

미국 :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은 조정되는 모습

지난해 4/4분기중 전기 대비 연율로 2.7% 증가하였던 민간소비(GDP의 약 70% 차지)는 올해에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소비의 동행지표인 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1~2월중 전월 대비로 소폭의 증가세에 그쳤으며, 더욱이 선행지표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월중 87.3을 기록하여 1월의 96.4에서 크게 하락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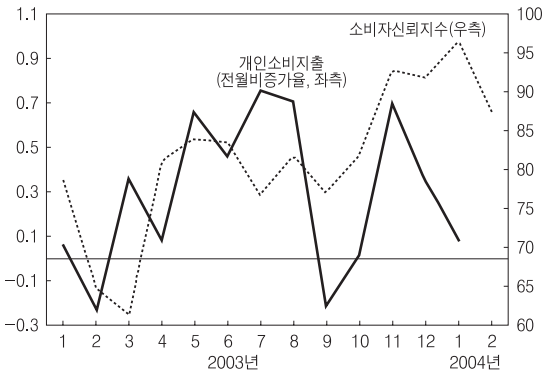
이러한 소비회복세의 둔화 조짐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농업부문의 취업자수는 지난해 10~11월중에 월평균 8만5천명 증가하였으나, 12월중에는 1만명 그리고 올 2월에는 2만명 증가에 머물렀고,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린스펀 의장은 의회에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단기적으로 고용수요를 억제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그는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미국기업들의 고용증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GDP의 약 16%를 차지하는 고정투자는 4/4분기중 전기 대비 연율로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정투자 중 설비 및 공장 등 비주거용투자(GDP의 10% 수준)는 9.6% 증가하여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의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 출하는 올 1월중 전월 대비 0.8% 증가하여 4/4분기의 월평균 증가율(1.1%)보다 다소 둔화되었지만 증가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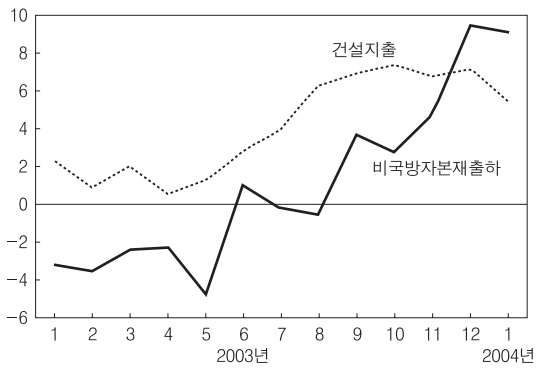
한편 고정투자 중에서 주거용투자(GDP의 5% 수준)는 4/4분기중에 8.6%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다. 이의 동행지표인 건설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역대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였으나, 올 1월에는 0.3% 감소로 반전하였다(〈그림 4〉 참조). 또한 선행지표인 신규주택에 대한 착공호수와 판매호수도 1~2월중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은 수준(30년 만기 경우 5.4%)에 머물러 있지만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세로 접어들면 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주택수요자들이 판

〈그림 3〉 개인소비지출과 소비자신뢰지수



〈그림 4〉 비국방자본재출하와 건설지출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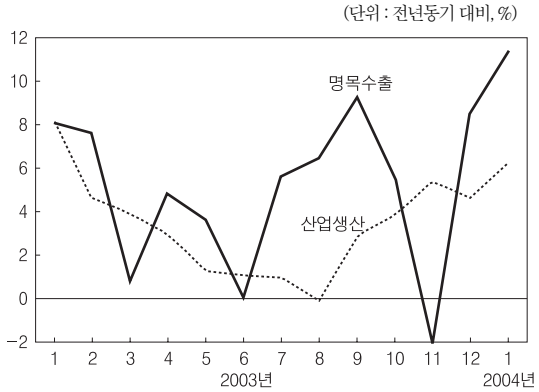
미국의 민간소비지출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외국 기업들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등이 고용증가에
장애요인이 되어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GDP의 약 10%를 차지하는 실질수출은 4/4분기중 전기 대비 연율로 21%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또한 달러화의 약세로 수출수요가 증가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한편 명목수출은 그동안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3년 12월~2004년 1월중에는 전월 대비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이는 공산품 및 서비스품목들의 수출은 괜찮은 편이지만 광우병파동으로 축산물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월간 430억달러 내외로 확대되었다.

현재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주체들은 전반적으로 향후 경기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자본지출 및 수출의 확대, 낮은 재고수준으로 산업생산이 지난 4/4분기중 전기 대비 1.3% 증가하였고 올 1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장가동률도 높아지는 모습이다(〈그림 5〉 참조). 생산의 선행지표인 공급자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도 2월중 61.4를 기록하여 전월(63.6)보다는 하락하였으나 기준치(50)를 10개월 연속 상회하여 향후 제조업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림 5〉 명목수출과 산업생산



일본 : 해외수요 주도의 경기회복세 뚜렷해져

일본경제는 지난 4/4분기중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6% 성장하여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총수출이 4.6%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6.3%, 민간소비는 0.9%가 각각 증가하였다.

수출(GDP의 13% 비중)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확대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올 1월중 명목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1.3%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수출의 확대에 힘입어 산업생산과 출하가 1월중 전월 대비 3% 내외 증가한 반면, 재고는 두 달 연속 감소하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출 및 생산의 증가로 기업들의 설비투자(GDP의 17% 수준)가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 동행지표인 자본재출하(운송기계 제외)는 1월중에도 전월대비 8.4%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선박·전력 제외)는 지난 4/4분기중 전기 대비 11.3%나 증가하였으나 올 1월에는 12.2% 감소하였는데, 경제전문가들은 수출과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곧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민간소비(GDP의 54% 수준)는 아직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의 동행지표인 소매판매와 가계 소비지출은 그동안 감소세가 둔화되다가, 올 1월에는 증가로 반전하였다. 이를 근거로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질임금이 감소세이며, 취업자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기보다는 부진의 정도가 완만하

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엔화강세로 수입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역시 부진함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월중 전년동월 대비 0.3% 감소를 보여 디플레이션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로지역 : 경기관련 심리지표들은 개선 추세

유로경제는 현재 유로화 강세로 수출이 부진하며, 높은 실업률과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경기관련 심리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유로지역은 수출이 GDP에서 35%를 차지하여 미국(10%)과 일본(13%)에 비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으므로 경기회복을 위하여 수출의 회복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수출은 지난해 4/4분기중 전기 대비 0.2% 증가에 그쳐 3/4분기(2.3%)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올 1월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여타 국가들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 경제전문가들은 유로화의 강세를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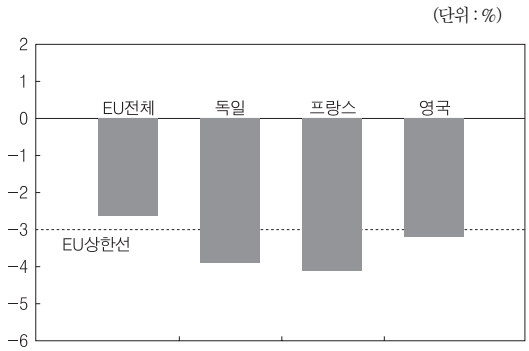
달러 대비 유로화가치는 지난 4/4분기중 평균 0.841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16% 정도 상승하였고, 이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유로화 강세는 수입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므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유로지역은 물가목표의 상한선을 현재 2%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를 상회하였으나 올해에는 원자재가격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2%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의 57%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전기 대비 0.1% 증가에 머물러 0.2% 증가한 3/4분기에 이어 부진을 지속하였다. 전문가들은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업률은 1월중 높은 수준인 8.8%를 11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는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경기회복을 확신하지 못하여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소매판매는 지난해 4/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0.4% 감소하였고, 올 1월에는 1.0% 증가에 머물렀다.

그러나 수출이 부진하지만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데 힘입어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2%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의 설비투자(GDP의 20% 수준)도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또한 세계경기 회복세가 유럽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조업체의 구매관리자지수(PMI)도 2월 현재 52.5를 기록하여 기준치(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제조업경기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유로지역 경기부진에 따라 주요 회원국들은 적자재정 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였다. 최근 유로지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2.7%를 기록하여 전년(2.3%)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가 부진한 독일과 프랑스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각각 3.9%와 4.1%로 확대되면서 역내 상한선인 3%를 2년 연속 초과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6> 재정적자/GDP 비율



중국 : 경기과열 억제 위하여 안정적 경제운영정책 방향

중국경제는 현재 수출과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도 과잉투자와 경기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35%나 증가하였던 수출은 올해에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위안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수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 1월중에는 수출이 19.8% 증가에 그쳐 상대적

으로 둔화되었으나, 이는 올해부터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인 증치세의 환급률을 15%에서 12%로 감축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수출(50.7%)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반락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임금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견실하게 증가하는 모습인데, 소매판매가 1~2월중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하였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곡물의 공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1월중 전년동월 대비 3.2%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2월중에는 곡물배급제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2.1% 증가에 그쳐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투자는 주택 및 철강 등의 부문에 대한 과잉투자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1~2월중 53%나 급증하였다.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국 경제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통화공급 억제, 은행지급준비금 한도 상향조정 및 주택관련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회간접자본 및 철강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 조치들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업들은 신규투자에 착수하려고 하면서 투자가 집중되어 증가율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3월 1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경제정책을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을 7% 내외로 하향조정하고 부분적인 경기과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설국채의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적자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였고, 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방만한 대출을 억제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성명기 KDI 계량모형팀 전문연구원〉

이 글은 IMF·OECD·세계은행 등 해외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용어해설

전사적 자원관리 (ERP :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인사·재무·생산 등 기업의 전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시스템·재무정보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ERP(전사적 자원관리)가 경영혁신기법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ERP 패키지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업무의 전산화는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종 개발도구를 이용, 회계·인사·급여 관리 등을 직접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구축하는 주문식 개발방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ERP에 따른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들이 개발·보급되면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다 쓰듯이 기업들도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산업경쟁력의 현주소와 시사점

최근 경기침체 속에 고용불안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불안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의 하나로서,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우리 산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국내 산업경쟁력에 대한 총체적 회의의 시각 그리고 벤처·신산업에 대한 환상도 어느 정도 불식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경제를 견인해 나갈 산업 내지 새로운 성장동력의 실체는 아직도 불분명하며, 우리의 산업경쟁력의 위상에 대한 깊은 불안과 의구는 여전하다.

이 글은 상기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경쟁력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명·모색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분석틀을 고안하고 이에 기초하여 얻은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경제 및 산업의 구조변화 분석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1980~2001년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변화를 ①총산출과 국내총생산 ②수요 및 공급 ③고용 ④산업간 연관관계 ⑤무역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서비스부문의 비중 증가이다. 1980~2001년 기간중 서비스부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총산출액 기준 40%에서 48%로, 명목 GDP 기준 52%에서 62%로, 국내 요소소득 기준 57%에서 68%로, 고용 기준 45%에서 61%(1995년)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의 비중 증가는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 비중의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부문은 1980년대 후반에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시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부실요인 해소와 재정비 과정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부문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 및 자동차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과거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섬유의류부문은 비중과 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수요·공급항목의 구조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종소비지출의 경우 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제품의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고정자본 형성의 경우에는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 제품의 구성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제품의 경우 기계 및 자동차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수출에서 제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섬유의류제품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수입품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총수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간에 걸쳐 증가한 반면, 제조업제품의 비중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광업제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수입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최

근에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관관계의 측면에 있어서는, 산업내 교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분류 및 소분류 부문 내에서 골고루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아웃소싱 증가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문에 대한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의 투입비중이 전부문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성 분석

광공업통계 자료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1984~2001년의 사업체 단위별 원자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다섯 자리로 표시된 산업분류를 KDI 다부문 모형의 29부문 분류체계와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사업체 규모는 종사자수에 따라 5~9명, 10~19명, 20~99명, 100~299명 및 300명 이상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기간은 1985~89년, 1989~97년, 1998~2001년의 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은 부문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석유석탄제품, 일차금속제품, 전기전자 등의 생산성이 높은 반면, 섬유의류, 금속제품, 정밀기계 등의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 기간에 걸쳐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생산성이 높은데, 규모에 따른 업체간 생산성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생산성의 증가율 역시 부문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로는 전기전자부문의 증가율이 다른 부문을 크게 압도하고 있어 제조업 평균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부문들은 제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기전자와 나머지 부문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위로 보면, 비금속광물제품, 일차금속제품,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도 비교적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섬유의류, 지제품 및 인쇄출판, 금속제품 부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대상 전기간중 사업체 규모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를 시기별로 보면, 제1기(1985~89년)에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으나, 제2기(1989~97년)에 들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역전되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제3기(1998~2001년)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는 대기업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생산성

시계열상으로 볼 때 자본생산성은 노동생산성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전자부품, IT기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산업간 및 사업체 규모 집단간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체 규모별 자본생산성은 逆U(inverted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 경우 자본생산성은 완만히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간 규모의 사업체에서 자본사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 자본생산성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방식을 이용할 경우 1985~2001년 기간중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약 4.33%로 계산되었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 후반까지 4%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11.6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식음료품, 섬유의류, 지제품 및 인쇄출판, 석유석탄제품, 금속제품, 정밀기계 등이 전기간 동안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전기전자부문은 전기간중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거의 주도할 정도로 높은 증

가율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부문은 전기전자, 기계 및 수송기계(자동차 제외) 부문에 불과하다. 이들 부문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기록적인 생산성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총요소생산성 변동추이는 부가가치 변동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1기에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높았으나, 2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역전되었으며, 3기에 들어서는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변지수(multilateral index) 방식에 의한 생산성 분석결과는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것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의 성장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많은 부분은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부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의 빠른 생산성 증대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부문별 및 사업체 규모별 생산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기전자, 자동차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부문일수록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고 이들의 생산성 증가율 및 생산성 증가의 성장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기업 주도에 의한 제조업부문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매우 저조한 점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제조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한국 경제 최대의 숙제임을 시사한다.

무역성과 분석

2000년 기준 한·중·일 3국의 산업별 수출품 구성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세 나라의 주력 산업의 경쟁과 대립 구도 그리고 보완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IT기기, 반도체, 섬유·의류, 화학제품, 중국은 섬유·의류 및 IT기기, 일본은 자동차, 일반기계, IT기기 및 화학제품이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2~2000년 기간중 주력 수출품이었던 섬유·의류가 26%에서 12%로 급감한 반면 IT기기와 반도체의 수출비중이 각각 13%에서 20%로, 9%에서 12%로 증가하였다. 중국 역시 섬유·의류의 비중이 42%에서 28%로 급감한 반면, IT기기의 수출이 7%에서 16%로 급증하여 한국과 유사한 수출패턴 변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17.7%), 일반기계(16.4%), 전기전자부문(32.7%), 화학제품(10.9%) 등이 높은 수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수출점유율을 보면, 3국 모두 전기전자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이들 산업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16.7%), 정밀기계 및 반도체(각각 16%) 및 일반기계(14.4%)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전자부문 등 기술집약 산업군에서 높은 수출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통 주력수출상품이었던 섬유·의류제품의 점유율이 7.4%에서 5.8%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부문의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수송기계(자동차, 선박) 및 화학제품 그리고 석유·석탄 등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에는 섬유·의류가 전세계시장의 19.5%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전기전자부문의 수출점유율이 한국을 추월하여 급속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모두 전기전자부문에서 높은 경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외에 정밀기계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 및 중국과 높은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경합도(0.88)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전자부문과 더불어 일차금속, 정밀기계 및 일반기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우 전기전자부문에서의 경쟁이 가장 심하며, 정밀기계 및 금속제품에서의 경쟁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서도 전기전자부문에서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며, 특히 1995년 이후 선박부문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전자부문에서의 3국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에 생산거점을 구축하여 수출을 확대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작성해 보면 3국 모두 전기전자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IT기기, 가전기기, 석유·석탄 및 섬유·의류 등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음식료품, 정밀기계, 일반기계 및 금속제품에서는 비교열위에 있다.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전자부분품, IT기기, 정밀기계, 일반기계 등에 비교우위가 있는 반면 음식료품, 석유·석탄, 섬유·의류, 가전기기 및 기타제조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인다. 중국은 섬유·의류, 가전기기, IT기기, 전자부품 및 기타제조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화학, 정밀기계 등에서는 비교열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하여 각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으나, 일본은 화학제품을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수출특화품목인 가전기기, 기타제조업 및 금속제품 등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IT기기 및 자동차, 선박 등이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었고, 화학, 반도체, 전자부품, 일반·정밀기계, 일차금속 등에서 수입특화 정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본은 화학제품만이 수출특화품목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된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제조업의 수입특화 정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이외의 모든 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특화품목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품목은 금속제품, 가전기기, 자동차, 선박 등이며,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된 분야는 화학, 석유·석탄 및 전자부품 등이다. 반면 수출특화품목이면서도 지수가 하락한 부문은 섬유·의류, 반도체, IT기기, 기타제조업제품 등이고 수입특화가 심화된 부문은 음식료품 및 일차금속제품으로 나타났다.

산업내 무역지수를 통해 파악한 산업경쟁력 패턴은 산업간 무역 분석이 파악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 및 일본과의 교역은 수직적 산업내 무역(VIIT)이 수평적 산업내 무역(HIIT)을 압도하는 경향을 보여 우리가 유사한 재화를 생산·수출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품질과 가격이 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격차가 줄어드는 어떤 단서도 아직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와 중국의 경우,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제품군이 한국의 유사한 제품군에 품질과 가격 면에서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SEAN의 경우,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을 개관하기 위하여 한국 200대 기업과 세계 500대 기업의 R&D투자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국내기업의 R&D투자 총액은 2000년에 들어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아직까지 세계적 기업과의 격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절대적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산업별 한국 1위 기업의 R&D투자는 세계 500대 기업 평균의 30% 수준이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5%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기업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연구개발집약도)의 경우 한국기업의 평균이 2.0%에 불과한 반면, 세계기업은 4.2%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6~2000년 기간중 한국 200대 기업의 경우 2.2%에서 2.0%로 감소한 반면, 세계 500대 기업은 3.9%에서 4.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500대 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연구개발집약도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산업별로는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높으나 한국은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의약, 기계 등의 비중은 매우 낮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집약도와 매출액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가 세계기업의 경우 매우 높은 반면, 한국기업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기업성장에 대한 R&D투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R&D투자가 현저히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R&D활동에 있어서 대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특히 상위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부문의 R&D활동이 두드러지게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의 민간기업 R&D 활동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R&D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연구원수에 있어서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2배 이상(1997년 1만7,703명→2001년 3만6,418명) 증가하였고, 박사급 연구원수는 3배 이상(1997년 474명→2001년 1,543명)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대기업은 연구원수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박사급 연구원수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연구개발집약도 역시 중소기업은 증가(1997년 2.81%→2001년 3.69%)한 반면, 대기업은 감소(2.05%→1.9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가 모든 중소기업에서 발견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측면에 있어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질적 고도화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외환위기 이후에 민간기업의 R&D활동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 집약적 신기술기반기업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R&D활동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익성 및 재무성과 분석

수익성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성과는 산업경쟁력의 중요한 결과인 동시에 결정요인이다. 수익성 및 재무성과 분석결과 가운데 주목할 점은 재무성과가 외환위기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분석지표 및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재무성과에 있어서 뚜렷한 격차가 상존한다. 예를 들면, 수익성 지표의 하나인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경우, 1990~1997년 기간동안 평균수치가 중소기업이 0.2% 대기업이 2.4%였으며, 1998~2002년 기간동안은 대기업이 0.4%인 반면 중소기업은 −0.2%를 기록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규모간 격차는 총자본 경상이익률이나 기업 경상이익률 등 여타 수익성지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장성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상존한다. 예를 들면, 매출액 증가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행투자 판단지표인 유형자산 증가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외환위기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감소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유형자산 및 총자산 증가율의 감소추세는 향후 국내 제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석기간 동안 제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69%를 기록하고 있다. 기간별 부채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이전(1990~96년)의 평균 부채비율이 290%를 보이고 있는 반면 1998~2002년은 213%로 점차 안정적인 비율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2002년의 경우 150%로 그동안 기업들의 구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채비율이 개선된 것은 경제전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설비투자위축에 따른 차입수요 감소 및 금리하락에 힘입은 금융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부가가치(EVA)를 활용한 국내 제조업체의 실적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는 전년 대비 −39.8%p 감소한 180,31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1991~96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2.3%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후 1998, 1999년 계속 감소를 보이다가, 2000년에는 상승하였으나 다시 2001년에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후 2002년에는 전년 대비 79.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동안 수출, 내수 모두 호조를 보이고 이에 따라 매출액의 증가세가 전년도(0.65%)에 비해 9.12%로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리하락과 환율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양(+)의 EVA 값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였다는 의미로 기업의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및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에 대한 비용까지 차감한 후의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규모계층별 추이를 보면 전산업에서 10~19인 규모계층의 연간 변동률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가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10~19인 규모계층 그리고 그 다음으로 1~9인 규모계층이 외환위기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취약한 규모계층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기업은 그동안 차입자본에 의존한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을 통하여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확충하여 왔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차입금 상환 및 채무재조정 등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졌으며 경영개선 및 금리하락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수익성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 인위적인 절차에 의해 단기간에 이루어져 아직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자율적 경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외환위기로 인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 또한 부채비중의 지속적 감축, 유동성 제고, 효율적인 유형자산 투자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구조조정의 진행, 금융·상품시장 개방의 진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수익구조는 과거의 경험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관련제도의 정비 그리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충격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투자효율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외환위기 이후의 FDI 급증에 힘입어 외투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의 비중은 1990년 2.3%에서 2000년에는 13.7%로 크게 높아졌는데, 2001년 현재 약 7천개에 달하는 외투기업은 국내 총생산의 14.8%, 제조업 고용의 8.3% 그리고 국내 총수출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그 국민경제적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GDP 대비 FDI 비중,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등에 있어서는 아직 선진국 및 동아시아 경쟁국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FDI는 2000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격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의 지역적 편중도 또한 심하여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편중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FDI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FDI는 투자대상기업 자신의 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산업 내 타 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전방파급효과는 확실하지 않으며, 외투기업의 정의나 분석대상 산업의 범위, 지표의 구성이나 모형설정 등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류(downstream)산업에 있어서는 생산성에 (+)의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방파급효과의 경우 분석의 모형 설정에 따라 (−)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효과의 방향을 떠나, 이러한 외부효과의 존재는 FDI의 공공재적 성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정부의 투자유치 지원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해외투자는 1997년을 정점으로 계속 늘어나다가 외환위기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2002년도 전체 해외투자의 49.2%를 차지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였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가 주투자대상 지역(2002년 투자의 49.2%)이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자료의 제약상 심층 분석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이러한 추세는 국내 업체가 위기 이후 사업·구조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해외생산체제 구축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 중 중국시장 진출 여력을 갖춘 기업이

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외국인투자는 불안정한 저성장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심화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과 국내 제도의 질적 개선에 지대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는 이미 제2기,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위기 직후에는 지분매각 또는 자산·영업권 매각 등과 같은 M&A 방식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후에는 합작투자, 지분참여, 업무제휴 등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투자의 내용도 점차 다원화·고도화되고 있다. 대규모 투자물량 소진으로 총투자액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고르게 소규모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세계 FDI시장은 1980년대 이래 제3차 침체기에 있으나, 일정 기간의 조정기를 거쳐 조만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 FDI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 특히 OECD권 선도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산업국 간의 M&A 및 전략적 제휴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 일본, EU국가의 동북아투자에 관한 고부가 활동 및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입지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유치 전략 및 추진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최근의 투자침체, 중국으로의 FDI 집중추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산업매력도와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유치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M&A 형식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의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 및 M&A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친화적인 새로운 경제·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여타 지역·부문으로 확산하는 한편, 외투기업에 대한 국가R&D사업의 전면개방, 이들을 위한 맞춤형 인력공급 등과 같은 旣투자업체의 토착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점

이번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생산 네트워크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외환위기 후에도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제조업 부문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수익성 등에서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 양극화의 진전으로 국내 산업기반의 와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로의 공장이전 문제 또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은 상위 선도기업과 하위 중소 부품기업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고 산업 연관관계 역시, 선진국에 비하여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현재의 생산 중심의 산업활동이 보다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에서 보다 고부가가치 영역을 차지하는 연구개발, 디자인, 브랜드 구축을 포함하는 마케팅 등의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국내 산업의 취약 부분인 부품·소재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산업 형성의 기반인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강화를 통한 혁신 주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섬유, 신발, 가전제품과 같이 기존의 성장주력 산업이었으나 임금경쟁력의 악화로 급속한 사양길에 접어든 산업이라 할지라도 기술혁신을 통하여 일부 품목과 분야에서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수 있다. 대량생산체제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일부 품목에 집중하는 다품종소량생산 단계를 거쳐 기술개발, 상품기획, 시제품생산 단계에 이르는 구조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일정규모의 생산을 유지하거나 디자인이나 상표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우천식** KDI 지식경제팀 연구위원〉

목돈 마련, 기교보다는 우직함이 중요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빨리 목돈을 모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길 희망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디고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목돈만들기 과정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목돈마련의 왕도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면 과연 가장 빠른 목돈마련의 길은 무엇일까? 수익률 높은 좋은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일까 아니면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이 저축하는 것일까?

해답 공개에 앞서 퀴즈 하나를 풀어보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재테크 감각을 동원해 다음 퀴즈에 대해 답을 구해보기 바란다. 퀴즈의 제목은 '목돈 1억원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다.

가령 매월 150만원씩을 저축할 수 있는 당신이 이를 모아 1억원의 목돈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자.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집안에 큰 저금통을 마련하고 여기에 꼬박꼬박 채우는 방법이다. 물론 여기에는 투자가 개입되지 않은 만큼 이자나 수익은 한 푼도 없다. 말 그대로 자신의 민족자본만으로 1억원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반(反) 재테크적인 바보 같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뒤의 방법과의 비교를 위해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때 이 방법을 통해 1억원이 만들어지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5년 7개월이 나온다. 단순히 1억원을 150만원으로 나눈 기간이다.

〈저축 금액별 1억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해 걸리는 기간〉

저축금액	적금(연 5% 가정)	주식형 펀드(연 9% 가정)
월 50만원	152개월(12년 8개월)	123개월(10년 3개월)
월 100만원	85개월(7년 1개월)	75개월(6년 3개월)
월 150만원	59개월(4년 11개월)	55개월(4년 7개월)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목돈마련 형태로 은행 정기적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적금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당연 첫 번째 방법보다는 그만큼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금리수준을 반영해 연 5% 이율(단리, 대부분의 적금상품은 단리로 이자를 계산한다)의 적금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1억원까지 걸리는 기간을 계산해 보면 4년 11개월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그냥 모으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상당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세 번째 방법은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평균 주가상승률을 감안해 연 9%(복리,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단리 계산법에 비해 이자가 커진다)의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과연 1억원의 목돈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 적금 가입에 비해 수익률이 거의 두 배에 이르고 더욱이 이자계산 방법도 복리계산으로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법인 셈이다. 그런 만큼 목표 금액인 1억원까지 걸리는 기간도 두 번째 방법에 비해 더



욱 당겨질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나? 두 번째 방법이 4년여 걸리니까 세 번째 방법은 3년 혹은 그 이하? 모두 다 아니다. 세 번째 방법의 경우에도 1억원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 7개월이다. 나름대로 최선의 투자결과를 가지고 예측했음에도 당겨지는 것은 하찮은(?) 적금보다 겨우 4개월 남짓일 뿐이다. 그것도 주식투자에 따른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말이다. 언뜻 믿기지 않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목돈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다. 바로 "기교가 우직함을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좋은 상품과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목표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축지법처럼 하루아침에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익률만 믿고 저축을 소홀히 한다면 목돈마련의 길은 좀처럼 당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더 절약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많이 저축하느냐가 목돈마련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목돈마련의 왕도를 꼽으라면 절약과 좋은 상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절약을 꼽고자 한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은행이 파산하면 내 예금은 어찌 되나?

은행이 망한다는 건 불과 6, 7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1997년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2003년 12월말 현재 15개의 은행을 비롯하여 29개의 종합금융회사, 10개의 증권회사, 17개의 보험회사, 129개의 상호저축은행 등 모두 809개의 금융회사가 인가취소·합병·해산·영업이전 등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예금보호제도
-원금·이자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

이처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그곳에 맡겨 둔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예금보호에 관한 제도를 잘 알고 대응하면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2001년 1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을 한 사람은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납부한 보험료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야 할 예금보다 적을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금보험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이다.

예금자는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는다. 예금 전액을 보장해 주면 좋을 텐데 왜 일부만 보장해 주는 것일까?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금의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예금을 전액 보장해 줄 경우, 예금자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기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곳만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고수익·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행태를 추구해서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보험료 적립금 또는 공적자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해 줘야 하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를 막고 시장원리에 따른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금부분보호제도라고도 부른다.

2억을 예금할 사람이 이 돈을 전액 보장받는 방법은? 예를 들어, 4인 가족일 경우 각자의 명의로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최고 2억원까



지 보장받을 수 있다. 2억원을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해서 예금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 네 곳에 나누어 예금했다면? 같은 금융회사의 본·지점의 예금은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밖에 보장받지 못한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예금'에 한해 보호

그렇다면 모든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만이 보호 대상이다. 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금융회사이므로 역시 보호대상이다. 그러나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파이낸스사, 신용협동조합, 농협·수협의 단위조합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농·수협의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예금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예금'에 한해서만 보장한다는 점이다. '예금'은 금융회사가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아래 고객의 돈을 예치받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 등에 운용해서 그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자는 원래 예금한 금융회사와 맺은 약정이자를 지급받는 게 아니라,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거래하던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합병금융회사는 합병 전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게 되므로 예금자가 합병 전 금융회사와 거래하던 예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한편, 예금보호제 시행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파산하면서 예금액이 보장한도를 넘어 초과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금보호제도의 내용을 잘 몰랐던 탓이리라.

결국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돈은 자신의 책임 아래 운용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김인철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홍보실장/『나라경제』 편집위원
(august@kdi.re.kr)

용어해설

후순위채권
(subordinated bonds)

통상 후순위채권이라 함은 기한부 후순위채권 또는 기한부 후순위차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발행기업의 파산시 다른 일반채권·예금채권 등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하며,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는 변제순위가 앞선다. 변제순위가 낮은 대신 선순위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순위채권은 지급순위가 주주의 순위에 근접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에 의한 후순위채권 발행이 크게 늘었다. 통상 은행은 자본을 늘리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장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후순위채권 중에서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채권은 100%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나, 잔존만기가 5년 이내가 될 경우 발행채권의 20%씩을 매년 보완자본에서 제외시켜 5년 후 상환시 보완자본에서 100%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후순위채권은 보통 5~6년 만기로 발행된다.

후순위채권은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영구 후순위채권과 기한부 후순위채권으로 또 부대권리의 부여 유무에 따라 조건부 후순위채권과 일반 후순위채권으로 구분된다. 조건부 후순위채권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 특정권리가 부여된 후순위채권을 말하며, 일반 후순위채권은 특정 부대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은행들이 발행하고 있는 5~6년 만기의 후순위채권은 대부분 확정 만기를 가지고 있고, 금리가 높은 일반 기한부 후순위채권이다.

한편, 후순위채권은 중도 해지가 되지 않고, 이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없으며, 일부 원하는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매매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 곧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나라경제 정기구독 신청서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앞
FAX : (02) 3295-0744

아래 사항을 기입하신 후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기간** : 2004년 ___월호부터 200__년 ___월호까지 (　　년간)

▶ **신청부수** : _____부

▶ **신 청 자** : 개인 □　　기관 □

〈개인〉 성　명 :　　전　화 :
직장명 :　　직　위 :
우송처(주소) :
e-메일 :

〈기관〉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우송처(부서) :
신청자 성명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가 절약됩니다.
- 경제정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 1년 25,000원
- 2년 45,000원

□ **구독 문의 :** 전화 : (02)958-4656
(02)958-4326
e-메일 : nara@kdi.re.kr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참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3년판 45,000원

창간 이후 나라경제를 모두 영구보존판으로 묶었습니다.

나라경제 통합본은 경제사적 자료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KDI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 (02)958-4326
팩스 : (02)3295-0748

경제정보의 세계로 오십시오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경제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경제보도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논단과 세계 주요 외신의 경제관련 기사를 요약 ·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경제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보플러스
검색로봇이 매일 세계 주요 경제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류합니다.

클릭 경제교육
중·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실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TEL (02)958-4661 FAX (02)3295-0833